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 신상진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 신상진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통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통일디자인

가 격 ₩9,000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 황병덕, 신상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KINU 연구총서 ; 09-02)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507-5 93340 : ₩9,000

미중 관계[美中關係]

북한 핵무기 개발[北韓核武器開發]

349.42012-KDC4

327.73051-DDC21

CIP2009003834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세계금융위기와 미국경제패권의 쇠퇴	13
1. 미국경제패권의 위기	15
2.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	34
III.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미·중관계	69
1.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	71
2.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대립과 협력의 불균형적 양극체제	75
3. 향후 미·중관계 변화 유형	89
IV. 미·중관계 변화와 북한 핵문제	115
1. 미국과 중국의 북한 핵정책 현황	117
2. 향후 미·중관계 변화가 북한 핵문제에 미칠 영향	135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153
참고문헌	16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77



표 목 차

<표 II-1> 미국의 국제수지의 변화 推移	17
<표 II-2>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19
<표 II-3> 미국, 일본, 서독의 자본수익율과 이자율	22
<표 II-4>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국제무역의 변화추세	33
<표 II-5> 금융규제 관련 G20 세부 이슈별 합의사항	37
<표 II-6> 세계 주요국 국방비 비교	51
<표 II-7> 2020년 예상 중국 군사력 규모	54
<표 II-8> 주요국 GDP(2008년)	55
<표 II-9> 세계총량 대비 중국 주요지표 비중 (1820~2020년)	56
<표 II-10> 중국의 세계 GDP 증가량에 대한 기여도 (1980~2020년)	57
<표 II-11> 주요국의 상품수출입액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0~2005년)	58
<표 II-12> 중국의 세계 GDP 증가량에 대한 기여도 (1980~2020년)	62
<표 II-13> 중국이 직면한 4대 전환	65

I. 서론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정치경제의 구조는 Pax Britannica로부터 Pax Americana로 전환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타 국가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발달된 노동생산력,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문명(the way of american life), 정치적 민주주의, 막강한 군사력,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미국의 지도력이 투영된 국제기구 등을 매개로 형성되었다.

미국은 19세기 말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력을 지녔고,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선도 산업분야에서도 패권적 지위를 구축했다. 그러나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동북부의 상공업세력이 정치세력을 장악하고 내수시장 지향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대외정책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정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패권적 국제질서 구축이 세계대공황 발발 이전까지 지체되었다. 세계대공황으로 국제경제질서가 혼란에 빠지면서 미국 내부 국제주의적 세력이 국내정치를 장악하고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에 기반을 둔 국내 내수시장 중심의 산업자본세력을 대체하였다. 더욱이 보호주의가 세계경제위기를 촉진시키고 고립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에 극히 무기력한 정책으로 판명되면서 국제주의세력이 자유주의적 Pax Americana 국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시즘이 패퇴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련식 사회주의가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안보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질서 수립이 요구되었다. 그 당시 이러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유일무이하게 미국 밖에 없었다. 전후 미국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NATO 군사동맹 형성, 마샬플랜에 의한 서유럽 경제복원, 케인주의

I
II
III
IV
V

의 국제화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봉쇄를 위한 국제질서 수립을 완수하였다.

UN, NATO, 브레튼우즈협정, GATT 체제,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제도 및 기구를 통하여 미국은 일면으로는 Pax Americana에 통합된 국가를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Pax Americana의 국제경제체제에 통합된 국가들이 균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통합이익을 향유하게 하였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국제경제질서에 참가하는 국가에게 무역, 투자, 기술이전, 원조 등을 통한 통합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포디즘으로 불리는 고도의 물질문명(the way of american life)과 정치적 민주주의는 여타 국가들이 모방·추구하는 동양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 주도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서유럽 및 일본은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한국, 대만, 홍콩 등 제3세계의 일부국가들은 세계시장의 통합적 후발산업화를 이룩하였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문제로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전지구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대규모 금융기관의 도산, 주식시장 폭락, 환율불안과 함께 실업의 증가 및 경제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그동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서 부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더블딥(double dip) 논쟁이 시사를 하듯이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추세는 매우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의 정당성을 약화시켰고 미국의 경제패권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30년대 전후 형성된 포디즘의 기초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하였던 미국경제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지도적

지위가 흔들림에 따라 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러시아, 중국 등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기축통화 달러를 대체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달러를 결제통화로 사용해 왔던 산유국들도 결제통화를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주요국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인 노력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중심의 Pax Americana 경제질서를 활용하여 고도성장을 구가하였다. 중국은 과학혁명을 통해 이룩해야 하는 기술력을 국제경제질서의 자유화를 통해 손쉽게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선도국과의 경제력 격차를 손쉽게 축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중국은 저임금과 선도국의 저수준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시장에서 획득한 외화를 자본재 수입에 활용하여 높은 단계의 산업화를 달성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도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받는 등 국제경제질서를 활용하여 선도국과 달리 산업화를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다. Pax Britannica와 달리 미국중심 국제체제는 제국주의적 수탈체제가 아니라 후발국이 국제분업 및 세계시장 여건을 잘 활용하면 후발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필수적 환경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립된 Pax Americana 하의 미국의 축적양식은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집약적 자본축적을 기본으로 한다. 자본축적의 중심을 해외시장보다는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포드 산업자본주의의 자기중심적 축적양식을 통하여, 전후 Pax Americana의 패자인 미국은 해외시장 의존적인 축적양식으로 인하여 치열한 식민지쟁탈전을 초래한 제국주의의 모순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산업생산의 40% 이상이 수출되는 수출지향적 축적양식을 가진

I
II
III
IV
V

영국과는 달리 미국의 포드 산업자본주의는 GNP 대비 수출의존도가 4~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응집력 있는 내수시장을 토대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주변부를 식민지화하면서 직접적으로 수탈하지 않고, 주변부국가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자본주의를 이식받는 세계시장 통합적인 발전전략을 취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세계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상이한 발전전략을 취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체제와 결합된 후발산업화의 장점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력을 개발비용을 들이지 않고 후발자본주의적 산업화에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있다. 서구의 경우 과학기술혁명이 수백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일어나 산업화에 활용되었으나, 개발도상국은 교육투자를 통하여 이 기술을 자체개발하지 않고 단기간에 선진국으로부터 생산력을 이전받는 것이 훨씬 빨리 산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선진자본주의로부터 생산력의 이전 방법은 선진국의 자본재를 수입하여 산업설비를 구축하는 것, 신용자본의 국제화 속에서 외채를 통하여 선진국의 자본재를 수입하여 산업화를 진행하는 것, 생산자본의 국제화, 즉 다국적 기업의 합작투자를 유치하여 선진국의 기술을 수취하는 것,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기술특허를 도입하여 Know-how를 습득하는 데 있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을 비롯한 기타 개발도상국의 축적양식은 세계시장과 연계하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 소재, 생산재 등을 수입해야 하므로 수입집약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시장 지향적 후발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외환부족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중단기적 외환부족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대부자본을 차입하거나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존할 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증가시켜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과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아시아 4개국이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데에는 특이한 발전모델, 수출주도형 권위주의 발전양식에 힘입은 바가 크다. 동아시아 5개국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산성이 없어서 폐기된 저준위 기술과 저임금을 결합하여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여 달러를 벌어들이고, 선진국으로부터 높은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시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여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산업화과정에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권위주의적으로 억압하고, 자원 역시 권위주의적으로 배분하였다.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하는 데 필요한 수출증가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아진다. 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농산물 및 원자재를 수출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취한다면 이 전략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값싼 공산품의 수출을 통하여 획득한 외환으로 자본재를 수입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고, 다시 다음 단계의 공산품을 수출하여 획득한 외환으로 자본재산업의 수입대체산업화를 꾀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국가와는 달리 중국,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수입대체화에 의하여 발생된 경상수지 적자를 우선적으로 노동집약산업을 건설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자본·기술집약산업을 건설하는 수출지향적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점차 해소하였다.

1980년대부터 중국은 후발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인 대만, 한국, 싱가포르 모델을 모방하면서 평균 9.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미국의 실물부문에서 기초 기술혁신이 고갈되면서 자본축적은 금융부문으로 이전되었고, 이러

I
II
III
IV
V

한 포화상태의 선진국 유희자본은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동아시아 네 마리 용(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산업화를 도왔다. 1980년대 부터는 선진국 유희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중국의 산업화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는 영국중심의 국제체제보다 훨씬 더 빨리 경제적 불균등 성장을 가져와 패권국과 경쟁국 간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현실주의적 국제관계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질서가 패권국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불만족 경쟁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 발전양식 및 국제분업구조에 따라서 경쟁국에 유리한 국제질서가 Pax Americana의 경우처럼 체현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다른 경쟁국들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Pax Americana의 경제구조 때문에 급격하게 잠식당하고 새로운 헤게모니 경쟁·대립국면으로 전환되기 쉬운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Pax Americana 세계경제의 불균등 성장으로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진척시키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사회적 이해가 손상되지 않는 한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에 도전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구사하고 있고, 외환을 대부분 달러표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상 미국은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중국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달러 및 재무부 채권 2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의 향상으로 현 국제체제는 차이메리카(Chimerica) 또는 G2 체제로

지칭되기도 한다. 특히 2009년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금융위기, 안보문제 등을 논의하는 측면을 보면 세계는 미·중 양극체제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심장부, 월가에서 발생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G7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G2(미국과 중국),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듯이 미국과 중국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신경제’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미국의 단극적 파위에 견주어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중국의 부상이 진척되고 있다. 세계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들 사이에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 수습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겠지만, 패권적 경제질서가 균열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국제체계를 놓고 패권국과 경쟁국 사이에 패권갈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1929년 세계대공황은 세계정치경제의 패권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세계대공황은 후발산업화를 진척시키고 있던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하여금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도록 강제하였고, 일본 역시 태평양지역 패권국인 미국에 도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최근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위기로 파급되면서 미국경제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등 동북아질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기축통화 달러의 위기를 촉발시키고, 미국 주도의 세계금융질서의 개편을 가져올 수 있다. 실물경제 차원에서 구매력지수로 평가된 미·중 간 GDP 격차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2013년 전후로 발생할 것으로

I
II
III
IV
V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세계경제위기가 동북아 정치경제질서를 급격하게 변화시킬만한 독립변수로 작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대두된 기축통화문제, 보호무역주의 등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위기상황 및 지속여부를 분석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위기상황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향후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동북아 수준에서도 새로운 미·중관계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립과 협력구조를 지니고 있는 미·중관계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미국 패권의 지속, 미·중의 협력·대립적 양극체제, 미·중 간 갈등관계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 형태를 연구·분석할 것이다.

21세기 들어와 동북아에서는 과거 냉전 유산의 잔존에 따른 갈등과 대립, 미·중 패권경쟁,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공존과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 일본과 중국의 역내 주도권 경쟁, 중국·대만의 갈등, 역내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유동성 및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 환경은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의 첨단화와 군비증강 추세,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면서 협력과 갈등, 공조와 대립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미·중관계의 다양한 발전형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한반도에서도 북한 핵문제, 북한체제 향후전망 및 대북정책 수립문제 등 다양한 외교안보문제와 함께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발전형태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미·중관계 발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금의 진행 중인 북한 핵문제를 사례연구로서 분석한다. 과거 북한 핵문제는 주로 남·북관계 차원과 북·미관계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기본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안보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체제 안보는 물론, 중국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도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동북아에서 대량살상무기 경쟁이 벌어져서 중국 안보에 손상을 가져오지만, 북한 핵문제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과도한 제재를 가하면 북한체제 붕괴가 초래되어 중국 안보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개발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원칙 차원과 더불어 대륙세력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수하면 한국, 일본 등의 핵개발 추진을 야기하여 미국의 동북아지역 영향력 상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설사 북한과 핵협상을 추진할지라도 한반도 평화체제문제, 주한미군 지위문제 등이 논의되기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북한 핵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미·중관계 변화형태에 따른 북한 핵문제 전개양상을 분석한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제금융질서의 재편 논의는 물론, 향후 정치경제적 패권의 향방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각축을 벌일지 여부와 함께 사례연구로서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I

II

III

IV

V

Ⅱ. 세계금융위기와 미국경제패권의 쇠퇴



1. 미국경제패권의 위기

가. 미국경제 헤게모니의 쇠퇴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1970년대부터 1990년 전후까지 미국의 경제적 위상은 경제의 불균등 성장으로 인한 경쟁국의 산업화와 함께 축적위기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세계경제를 정치경제적으로 주도하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OECD 전체의 40% 이하로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성장률, 기술개발 등에 있어서도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뒤처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들이 1970년대 초부터 장기불황에 진입하여 세계시장에서 각 민족국가들의 투쟁은 심화되고 경제블럭화 및 보호무역주의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는 심대하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의 쇠퇴는 우선적으로 역동성이 극도로 약화된 생산력발전에 기인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870년부터 1950년까지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생산력 발전을 하였으나 1950년대 이래 노동생산성의 발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미국은 1929년 세계 공업생산량의 42%를 점하고 있었고 그 생산력의 토대는 과학적 경영방법으로서 테일러주의와 일관공정체제로서 포드 생산기술이었다. 이러한 생산기술은 경쟁국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고도의 생산력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에서 이 생산기술과 노동과정이 도입되기 이전 노동생산성은 2% 정도 상승했으나, 이후에는 6%를 상회하는 노동생산성 증가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노동생산성

I
II
III
IV
V

증가율은 1.4%에 머문다.¹ 이는 자본수익성 저하로 투자가 저하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미국의 생산력발전이 약화된 원인은 미국경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다른 선진자본주의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빨리 포드 산업기술이 고갈되어 자본계수가 증가일로에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자본 수익성 감소를 해외 직접투자를 통하여 보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세계시장 지향적인 미국 다국적 기업의 생산력 발전은 내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² 이러한 미국 다국적 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해외로의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생산조건이 일반화되면서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었다.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의 쇠퇴는 국민총생산 대비 투자율(I/Y)이 1960~1980년까지 17% 정도에 머물러서 신기술 개발속도 저하로부터 비롯되었다. 또한 생산력 발전이 지체된 원인은 3차 산업부문에 투자가 집중되고³ 정치·군사적인 헤게모니 기능을 행사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이 과도하여 민간 생산부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도 있다.⁴

197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 일본 등보다 현저하게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것은 포드 기초기술혁신이 상대적으

1. 전영재, 『미국 경제 생산성 신화 지속될 것인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 1.

2. E. Altvater and K. Hübner, *The End of the U.S. American Empire?* (in: Váth, W., *Political Regulation in the Great Crisis*, Berlin, 1989), p. 54.

3. 금융, 보험 등의 3차 산업분야에 미국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원인은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보다 빨리 축적위기에 빠지면서 실물축적보다 화폐축적을 선호하는 투기적 성향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이 부분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여, 금융, 보험, 정보, 통신 등의 3차 산업분야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개방 압력의 목표가 되었다.

4. E. Altvater and K. Hübner, *The End of the U.S. American Empire?*, p. 211.

로 빨리 고갈되고 낮은 투자율에 기인한 성장동력의 저하에 연유한다. 1970년대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아래 직접투자를 비롯한 장기 자본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경상수지가 1970년대에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해외로 차관, 직접투자 등의 형태로 자본을 수출하여 미국의 발전모델, 예컨대 포디즘을 세계로 전파하는 기능을 한 것을 의미한다. 헤게모니국가의 국제수지 적자는 자본수출로 인하여 비롯되는데 이것은 세계경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실물축적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표 II-1>참조).

● 표 II-1 미국의 국제수지의 변화 推移

(단위: 10억 달러)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경상수지	2.82	5.41	2.33	18.13	1.80	-112.75	-105.90
무역수지	4.89	4.95	2.59	8.91	-25.50	-122.15	-113.24
무역외수지	0.30	3.41	3.19	14.10	34.92	24.83	21.64
장기자본수지	-4.44	-7.28	-6.39	-19.69	-8.48	73.30	76.57
직접투자	-2.63	-4.60	-6.13	-11.64	-2.30	0.96	28.99
종합수지	-3.40	-1.29	-9.84	-5.30	-8.41	10.17	19.63
해외총자산	85.6	120.4	165.4	295.1	607.1	950.3	1380.0
해외총부채	40.9	58.8	106.9	220.9	500.8	1061.0	1983.0
해외순부채	44.7	61.5	58.5	74.2	106.3	-110.7	-603.0

자료: FRB, *Federal Reserve Bulletin*, May 1990.

경쟁국인 일본과 서독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에 의한 축적동력에 힘입어 수출입상품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폭발적인 수출증가에 힘입어 독일과 일본의 무역흑자는 거의 구조적인 것으로 되었다. 1990년도 한 해 동안 일본은 380억 달러, 독일은 49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미

I
II
III
IV
V

국과 영국은 각각 1천 40억 달러, 3백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해외 자본수출의 형태로 유출되어 일본과 독일은 세계 제1·2위의 채권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1980년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1990년도 순외채 규모가 6,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였다. Pax Americana의 초기 1950년대 미국은 생산력의 우위로 인한 경상수지의 흑자를 차관, 직접투자 등의 자본수출과 대외원조기금으로 활용하였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반대로 경제적 재원을 일본 및 서독으로부터 차입해야 했다.

20세기 초반 미국은 Pax Britannica을 Pax Americana로 대체할 수 있는 경제력(economic power)을 소지하였으나 세계경제의 경제적 주도권(economic leadership)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경제적 고립주의를 주창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1929년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1970년대까지 세계체제의 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하여 Pax Americana의 헤게모니국가로 기능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경제력(economic power)은 경제적 주도권(economic leadership)에 조응하면서 세계경제의 장기호황을 인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세계경제의 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나 이를 위한 경제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상, 즉 경제력과 경제적 주도능력의 괴리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괴리현상에 직면하여 패권국 미국은 금융자본의 국제화를 기본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세계에 강제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정당성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

선진국 사이에 생산조건이 점차 균일화되면서 세계화폐 달러는 그 가치를 상실하여 국제통화체제는 달러중심의 고정환율제로부터 1971

년에 브레턴우즈체제가 붕괴되고 나서야 비로소 변동환율제로 전환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래 표를 보면 대공황 시기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포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1950년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국가들을 앞서 나갔다. 그러나 포드 생산기술이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일반화되면서 1979년도 경우 독일,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84%를 기록하였고, 1998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표 II-2> 참조).

●표 II-2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연도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1929	100	49	26	53
1950	100	33	14	44
1979	100	84	55	86
1998	100	100	-	100

자료: OECD,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Paris, 1995); Bureau of Labor of Statistics, *Monthly Labour Review*, Vol. 123, No. 12.

이러한 생산조건의 균등화를 반영하여 미국중심의 달러·금본위제는 폐기되고 국가생산성 변화를 직접 반영하는 변동환율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영국 패권하의 금본위제가 붕괴하고 국제체계가 카오스로 넘어간 것과는 달리 달러·금본위제,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는 맞마로 국제체계의 카오스로 넘어가지 않고 달러본위제로 전환되어 미국 경제패권체제를 유지하였다.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는 상당정도 훼손되었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

I
II
III
IV
V

국경제의 위상, 압도적 정치군사적 우위, 미국패권에 대한 도전국 미 부상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미국의 경제적 패권유지는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달러는 1973~1980년 사이에 독일 마르크에 대하여 44%의 가치상실을 감수하였고, 다른 선진국 통화에 대하여서도 약 17%의 가치상실을 기록하였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달러·금화의 단일통화제도는 미국 달러와의 금태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시장기능이 우선하는 복수통화제도로 전환되었고,⁵ 이에 따라 국제통화질서는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움직이는 투기자본에 의하여 교란되었다. 또한 브레턴우즈체제가 붕괴되면서 실물축적 위기에 처한 자금이 금융부문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금융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는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을 해소하고자 시도된 케인즈주의적 확대재정정책은 단지 고율의 물가상승을 유발하였다. 치솟는 물가는 실물자산의 화폐가치를 상승시키고 이것을 담보로 신용공급은 증가하였고, 이러한 유동성은 생산부문에 투자되기보다는 화폐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목적에 공급되었다. 이 결과, 국제금융·통화체제는 한층 더 불안정해져서 화폐자본에 대한 거액인 이자율 및 환율이 실물자본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투기목적의 자본이동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1980년대에 국제화폐자본 이동의 50% 이상이 투기목적과 대부자본의 이자취득을 목적으로 이동하고

5. 1970년대 EC 결성으로 유럽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달러가 해외로 과잉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선진국들은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해외 보유 달러가 미국이 보유한 금 가치를 초과하면서 달러의 금 태환을 보장했던 브레턴우즈 통화체제는 붕괴되고 달러의 금태환은 정지되었다. 그 후 미국 달러는 금에 고정되었고 다시 각국 통화가 미국 달러에 연동되었던 브레턴우즈 달러·금본위제도는 각국 통화가치가 외환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로 대체되었다.

있는 것은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투기적 팽창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보겠다.

1980년대 미국은 국제통화·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달러의 가치저하를 막기 위하여 달러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물가상승을 저지하고 다른 면으로는 높은 실질이자율에 기반을 두는 금융정책에 의존하여 달러를 세계화폐로서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1979년 미국은 달러의 신뢰성 회복과 금융소득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이자율을 대폭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던 자본은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수익률 하락에 직면한 자본은 생산부문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부문에 투입되어 금융팽창을 폭발적으로 진전시켰다.

이러한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고금리의 추세는 생산부문에서 새로운 장기호황을 추진할 수 있는 생산조건의 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금융자본은 기본적으로 산업자본 이윤의 일부를 이자의 형태로 수취해 나간다. 대부자본은 국제금리의 고금리화를 배경으로 점점 산업자본의 가치증식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일본과 서독의 경우 산업자본과 대부자본의 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1965년 이래로 자본수익률은 점차 저하된다. 그러나 금리수준은 1970년대 보다 1980년대에 더 상승하였다. 따라서 자본수익률에서 명목이자율을 뺀 순자본수익률은 1970년대 보다 1980년대에서 엄청나게 감소하였다. 미국의 경우 순자본수익률은 負數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물가상승률이 1980년대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1970년대 실질금리는 훨씬 낮았을 것이고, 자본수익률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순자본수익률은 높았을 것이

I
II
III
IV
V

다. 1980년대에는 자본수익율의 저하와 더불어 금리수준의 상승으로 인하여 순자본수익률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실물축적과 화폐축적의 괴리가 훨씬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II-3> 참조).

표 II-3 미국, 일본, 서독의 자본수익율과 이자율

	미국			일본			서독		
	(1)	(2)	(3)	(1)	(2)	(3)	(1)	(2)	(3)
1965-1969	23.4	-	-	36.5	-	-	19.3	-	-10.5
1970	16.4	6.5	9.9	39.5	9.3	30.2	18.9	8.4	5.3
1975	15.7	6.9	8.8	18.5	9.3	9.2	13.7	8.4	5.3
1980	12.3	11.0	1.3	20.8	9.0	11.8	13.0	8.6	4.4
1981	12.4	12.9	-0.5	20.8	8.5	12.3	11.6	10.4	1.2
1982	10.4	11.9	-1.9	19.7	8.1	11.6	11.6	8.8	2.8

(1) 자본수익률: 총기업경영흑자/총설비

(2) 명목이자율: 단기공채의 실질이자율 + 소비재의 물가상승률

(3) 순자본수익률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983, p. 167.

1980년대 미국이 고금리정책을 취하는 것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달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과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미국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란의 회교혁명에 직면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여서 세계정치경제의 주도능력에 손상을 입었다. 소련의 확장정책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군비확장을 시도하였고 국방비 지출 규모를 대폭 증액하였다.

월남전 이후 1970년대 중반 국방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 이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6%를 상회하게 되었다. 또한 레이건 정부는 침체에 빠진 미국의 경제동력을 회복시키는 방안으로 케인즈주의를 포기하고 시카고학파의 통화주의에 입각하여 민간과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를 취하여 저축 및 투자증가를 유도하여 산업의 공급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레이저노믹스(Reaganomics)로 불리는 이러한 공급증시의 경제정책은 대폭적인 재정적자를 가져와서 카터 행정부 시절 GNP의 1~2%에 불과했던 미국의 재정적자는 공화당 정부에서 1983년 중 GNP의 6%를 상회하고 그 후에도 1,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누증된 재정적자의 규모는 1988년 미국 GNP의 50%를 상회하고 지불이자만도 총재정지출의 14% 정도에 이른다.

미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자를 민간부문의 소비억제와 저축 증대를 통하여 보전하지 못하고 고금리정책을 통하여 해외달러를 유입시켜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제적 헤게모니위기를 이자율 상승 등의 기축통화국의 기능행사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금리정책은 달러강세를 야기하고 미국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면서 재정적자와 더불어 무역적자 증대를 야기하였다. 고금리정책 추진으로 달러가 고평가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자본의 차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결과 1980년대 미국은 자본수출국으로부터 세계최대의 자본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가 초래한 고금리정책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를 야기, 대부분 주변부 국가에게 후발 포드주의적 산업화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이러한 제3세계 외채위기는 헤게모니체제로의 통합비용이

I
II
III
IV
V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서 신자유주의적 산업화 전략의 한계가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은 IMF를 앞세워 외채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경제구조를 신자유주의적 모델로 전환시켰다.

또한 1995년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GATT 체제를 대신하여 농산물 개방, 금융산업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WTO를 출범시켰다. GATT는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 협정이었으나, WTO는 불공정 통상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강제력을 띤 기구이다. 특히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농업, 금융업부문의 개방을 관철시켰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한 국가의 농업은 붕괴되었으며, 금융개방을 단행한 국가 역시 미국 발 금융위기 등과 같은 국제금융체계의 불안정에 노출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소장된 WTO 체제 출범으로 미국 헤게모니는 참여국들에게 동의보다는 강제기능이 우월하게 행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워싱턴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모델은 공기업 구조조정, 임금삭감, 고용유연성 확보, 정부재정지출 삭감 등으로 시장경쟁의 강화, 국가개입의 축소에 따른 최소국가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선진 각국들은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의 기초를 과거 케인즈적 총수요 관리정책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총공급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정책은 확대재정정책이 아니라 사회복지비를 삭감하는 긴축정책으로, 산업정책은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철폐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재분배정책은 기업에 유리하게 진행시켜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구호하에 국가개입을 축소시키는 반면, 시장의 자율기능을 확대시켜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2006년 미국경제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일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1.8%와 2.9%에 불과하였다.⁶ 미국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신경제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미국 제조업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 부문 노동생산성 증가가 대부분 자본장 비율증가에 의한 자본집약도 증가에 의하여 생성되었기 때문에 자본생산성 제고를 통한 자본수익성을 큰 폭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⁷ 더욱이 법인기업이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자본수익성은 저하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IT 산업으로 대별되는 신경제는 20세기 초반 포디즘으로 표명되는 새로운 기초기술혁신처럼 자본수익률을 대폭 향상시켜서 경제 전반을 선순환시키는 새로운 축적양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이후 미국은 반독점법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인수·합병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M&A를 통해 주식시장 비대화를 가져왔다.⁸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의 자유이동과 금융자본의 안

⁶ 1950년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6% 전후에 이르렀으나, 1970년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에 불과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국제비교』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2008), p. 26.

⁷ 안정옥, “소비적 근대성과 사회적 권리,” 백승욱 편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서울: 그린비, 2005), p. 111.

⁸ 특히 기업의 수익률에 비하여 기업 주식평가 가치가 고평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가계신용이 팽창하여 가계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과다하게 이루어졌다. 백승욱 편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p. 45.

I
II
III
IV
V

정적 투자 및 수익회수를 위해 WTO 체제를 출범시키는 한편, IMF·IBRD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미국으로 집중된 자본은 미국 내의 과잉 자본과 함께 거대한 금융부문으로 유입되어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 복합형 금융기관, 헤지펀드 및 파생상품 등이 대거 등장하였다. 따라서 ‘신경제’ 경제호황은 ‘달러-월가 레짐’으로 불리는 금융중심의 축적구조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자본이 기초기술혁신 고갈에 허덕이는 제조업 등의 실물부문에 투자되기보다는 화폐자본의 형태로 금융부문에 투자되어 투기자본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산업 팽창으로 외국인들이 미국기업,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등 세계자본은 미국으로 대량유입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여타 세계가 미국에서 보유한 자산액수는 미국 GDP 대비 46%였는데, 2000년 경우 그 비율이 78%로 증가하였다.⁹ 2003년 미국의 해외자산이 미국 GDP의 36%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융부문이 외국의 자금유입으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의 대형 제조업체가 금융기관을 거느리는 복합기업 형태로 전환되고 환투기, 주식시장 과대팽창, 부동산 투기 등의 금융팽창과 같은 세계시장의 기형적 발전현상을 영국의 경제학자 스투레인지(Susan Strange)는 ‘카지노자본주의’(casino capitalism)라고 부른다.¹⁰ 세계화폐 달리는 이미 1970년대 초반 악화되는 무역수지 때문에 브레턴우즈체제가 붕괴되어 그 태환성이 상실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1980년대부터는 미국의 경제력과 경제적 주도능력의 괴리

⁹-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21세기 전환기 미국 제국주의 경제학,” 백승욱 편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p. 212.

¹⁰- S. Strange, *Toward a Theory of Transnational Empire* (in: Våth, W., Political Regulation in the Great Crisis, Berlin, 1989).

가 발생하고, 과잉축적 위기로 인한 장기불황이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자본축적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화폐축적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중심 축적양식은 주식, 부동산 버블로 이어져서 금융위기 발생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2007년부터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로 이어졌다. 1980년대 이전에는 헤게모니국가인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경제를 정합게임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은 헤게모니 위기에 직면하였고 세계 기축통화 발권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달러를 자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서 미국은 자국의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세계금융시장으로 달러를 유입시켜서 쌍둥이적자를 보전하였다. 중국, 일본 등은 미국으로부터 거둔 무역흑자를 다시 미국 구채무부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미국 금융시장으로 환류시킴으로써 미국의 쌍둥이적자를 보전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기준 미국 재무성 채권의 경우 일본은 5,730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은 5,830억 달러로서 세계 최대의 미국 채권보유국이 되었다. 미국 쌍둥이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서 중국, 일본 등의 달러환류, 외국의 대미투자 등은 기본적으로 패권국 미국경제의 신뢰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신경제 시기의 호황을 재현하지 못한다면 달러의 신뢰성은 의심을 받게 되면서 미국으로 금융자본 집중현상은 사라지고 미국경제의 헤게모니 쇠퇴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I
II
III
IV
V

나. 미국경제패권의 위기로서 세계금융위기

(1) 금융위기의 원인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발단된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 발전역사에서 일회적으로 출현한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자본수익성에 대한 위기를 기본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부의 패권국 실물부문에 서의 자본수익률이 저하되면서 금융부문으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패권국이 자국의 자본축적을 만회하거나 축적위기를 타국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국제체제를 구축한다. 팽창을 거듭했던 금융부문의 버블이 마침내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전 방위로 파급되어 세계경제위기는 심화된다. 이 경우 실물부문의 자본축적이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자본·노동생산성을 제고시켰던 기초기술혁신이 고갈되면서 자본수익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¹¹

멘쉬의 경험적 연구¹²에 의하면 기초기술혁신은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비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발명이 증대함에 따라서 개선기술혁신이 진행되는 데 비하여 기초기술혁신은 발명이 누적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발명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명의 질이 기초기술혁신

¹¹ 이에 대해서는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 1992), pp. 54~56, 112~141 참조. 멘쉬는 기술혁신의 형태를 기초기술혁신(Baseinnovation)과 개선기술혁신(Improvementinnovation)으로 구별한다. 기초기술혁신은 국민경제 상당부문을 망라하는 기술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반면, 개선기술혁신은 주어진 기초기술혁신의 범위에서 점진적인 양적 변화를 의미한다.

¹² G. Mensch, *Basisinnovation und Verbesserunginnovation* (in: Zeitschrift für Betriebswirtschaft Nr. 4, 1972); G. Mensch, *Das technologische Patt-Innovation überwinden die Depression* (Frankfurt/M., 1975).

을 결정한다. 또한 기초기술혁신 발명의 시기와 기초기술혁신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앞에서 논의된 기준 하에서 멘쉬는 독일에서 1740년과 1950년 사이 기초기술혁신의 누적된 시기의 정점을 1765년, 1830년, 1840년, 1885년, 1935년으로 잡고 있다. 19세기의 기초기술혁신은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산업부분에 집중되어 일어났다. 19세기의 전반기에는 철도산업, 후반기에는 전기산업과 화학산업 및 철강산업에 집중되었다. 이에 반하여 1930년대에는 기초기술혁신이 많은 산업분야에 걸쳐서 일어났다. 석유화학공업 및 합성수지업, 석유정제업, 항공산업 이외에도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전자산업 등이 엄청난 기초기술혁신의 동력을 얻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본계수¹³를 저하시키는 기초기술혁신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면 자본 수익율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성화되어서 장기적 호황이 지속된다. 장기호황은 자본계수가 상승하게 될 때까지 가속화된다. 장기적 호황추세의 상승국면은 기초기술혁신이 일반화되는 시점, 즉 전 산업의 자본계수가 올라가기 전까지 지속된다. 지속된 장기적 호황추세의 상승국면이 하강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본계수가 증가하여 평균이윤율 자체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기초기술혁신이 점차 고갈되어 자본계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집약적인 생산기술이 생산과정에 도입되어 발생한다. 개별자본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생산조건이 일반화되고 장기적 호황추세가 끝나면서 자본집약적인 개선기술혁신

¹³ 자본계수는 자본집약도 / 노동생산성으로 표현된다. 즉, 장치산업이 투입되어 증가되는 자본집약도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보다 낮으면 자본계수는 감소하고 자본 수익성은 증가한다.

I
II
III
IV
V

이 생산과정에 도입되어 자본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국가는 시장 이자율을 내려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금융정책을 시행한다. 낮은 시장 이자율로 시장에 공급된 자금은 실물부문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과잉 축적된 자본이다. 이 자금은 금융부문의 투기자본 형태로 이동하여 금융부문의 팽창을 가져오고,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이상 급등현상을 온다.

수익성의 저하는 실물부문에서 자본이 수익성이 높은 금융부문으로 이탈하면서 실물부문의 경쟁이 잠시 줄어들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잠시 성장세를 보이는 국면을 ‘화려한 시절’이라는 의미의 벨 에포크(belle e’poque)¹⁴라고 한다. 이 시기 자본은 해외기업 투자, 국채매입,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저하하는 수익성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에서의 경쟁도 약화되어 실물부문의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기초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양식은 위기에 처한다. 오히려 이 시기 패권국은 금융팽창 과정에서 손쉽게 자본·기술을 이전받은 새로운 국가들에게 패권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세계대공황 이전의 벨 에포크(belle e’poque)시절, 영국 중산층은 풍족한 소비생활을 영위하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을 통하여 금융팽창을 도모하였던 미국 역시 금융축적 중심의 ‘신경제’(new economy)를 통하여 1970년대 경제침체기로부터 회복되는 성장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벨에포크(belle e’poque)는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에 의해 종막을 고했다. 실물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동산 금융버블은

¹⁴ 벨에포크(belle e’poque)는 1870년 초 경제위기에 돌고 돌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세계대공황 이전까지의 금융 팽창으로 경제 흥성기를 맞이한 영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반니 아리기, 백승욱 옮김,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시대의 기원』 (서울: 그린비, 2008), pp. 303, 307.

마침내 폭발하여 실물경제에게까지 막대한 파괴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기초기술혁신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나가면서 실물부문이 팽창하는 시기 말에 금융팽창이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아리키는 ‘신호적 위기’(signal crisis)라고 지칭하고, 금융부문의 위기가 폭발하여 발생하는 위기를 ‘최종적 위기’(terminal crisis)라고 부른다. 이 최종적 위기단계에서는 더 이상 발전양식이 기능하지 못하고 ‘체계의 카오스’단계로 넘어간다.¹⁵ 19세기 1873년 대공황으로부터 영국이 위기에 빠지고 금융화가 시작되어 벨에포크 시기를 1929년 대공황시기까지 거치면서 마침내 세계패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었다. 미국경제 역시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거치고 실물부문이 위기에 처하면서 금융축적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금융산업 위주의 신경제 벨에포크를 거쳐 2007년 금융위기를 맞이하였다.

(2) 금융위기의 전개

2007년 8월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일단 진정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2008년 3월 미국의 5위 투자회사인 베어스탠스의 파산 및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세계금융시장 전반에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회의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법안 승인에도 불구하고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이 확산되고 세계주요국에서 은행 간 대출시장이 경색되어 자금 중개기능이 마비되고 기업금융이 얼어붙는 신뢰의 위기가 발생하였다.

¹⁵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서울: 그린비, 2006), p. 289.

주택가격의 하락과 금융기관의 손실에서 비롯된 유동성 악화가 신용위기를 촉발시키고, 신용위기가 다시 유동성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실물경제의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모기지 관련 손실이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신용위기로 연결되는 한편, 금융기관들의 신용회수로 기업의 자금경색이 지속됨으로써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상환하면서 부동산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쇼크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의 확산에 따라 투자자금의 안전자산(달러)으로의 대규모 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은 폭락과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주가하락으로 逆자산효과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실질민간소비를 약화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각국의 외환시장은 급격한 등락을 반복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원화를 비롯하여 호주달러, 영국파운드화, EU유로화 등의 환율이 상승하였다.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흥시장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급락하였고, 제도통합 측면에서 취약한 면을 보이는 유로화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화 및 일본엔화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율이 급속히 상승한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 약화와 소비위축을 초래함으로써 급격한 경기후퇴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내수기업은 채산성이 악화되고 기업들은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으로 도산위험에 노정되어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위험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각종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가 증폭되면서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도산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금융 위축 등으로 미국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08년 9월 현재 자산규모 1억 달러 이상 기준으로 미국기업의 부도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⁶ 이러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은행이 추정 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 정도 최악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4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국제무역의 변화추세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미 국	수출	17.7	19.7	17.4	△3.8	12.4	△21.1	△23.8
	수입	11.9	14.3	14.4	△9.2	7.5	△27.1	△34.3
일 본	수출	5.9	1.8	3.2	△23.1	△3.5	△45.7	△49.4
	수입	10.4	11.2	21.1	△9.5	7.9	△31.9	△43.0
영 국	수출	1.9	0.1	3.6	△4.2	0.3	△29.4	△20.8
	수입	△3.0	2.5	△0.2	△8.0	△2.2	△15.1	△20.5
유로지역	수출	7.1	8.6	5.6	△5.0	3.9	△24.8	△23.9
	수입	8.8	11.2	12.5	△2.5	7.3	△22.9	△21.4

한편, 금융위기는 세계무역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2009년 1~2월 주요 선진국 무역량은 30% 전후로 감소하고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통해 실업자 발생을 저지하고 경상수지의 보전을 위해 보호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보호주의 성향은 1930년대에 존재하

¹⁶ 박현수,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10.15).

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의 활성화로서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계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입하고 있다. 모기지 및 소비자 신용관련 금융권의 최대 손실규모는 구제금융 투입금액보다 적은 6,635억 달러 규모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추정하고 있다.¹⁷ 금융위기가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유럽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도 대규모 유동성 투입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에 착수하였다. 또한 금융위기의 전염을 방지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국가 간 정책공조도 확대하였다. 세계 각국의 각종 정책추진으로 금융불안이 점차 진정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¹⁸ 이 과정에서 국제적 갈등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2.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

가.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로서 G2 시대 개막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 패러다임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은 1980년 이후 자국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의 세계화를 이룩하였으나, 2007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회의가 급속히 대두되었다. 금융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급진전되었으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신자유주

¹⁷ 위의 책, p. 16.

¹⁸ 장재철,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10.22), p. 18.

의 세계화의 지속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유시장경제적 메카니즘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면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경제운용방식 가운데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Tobin식 경제 운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모든 것을 위임해온 free market에 대한 자성으로서 Friedman형태의 시장중심주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근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미국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졌으며, 미국 정부의 쌍둥이적자에 대한 방임적 태도,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달러의 미국 집중현상 등이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국중심의 Pax Americana 경제질서는 상당정도 수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4월 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안정기금(FSF)의 확대개편을 통한 감독시스템 구축,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조세피난처 규제, BIS 규제강화 등 글로벌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 시장구조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또한 G20에서 IMF와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협력을 통해 향후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이들 기구가 세계금융시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합의하였다.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모든 헤지펀드는 자국 금융당국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고, 특히 미국은 FRB를 통하여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시장 등을 철저히 감독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¹⁹ 조세피난처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가 세계금융위기의 단초라는 인식 아래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

I
II
III
IV
V

하였다. 조세피난처의 리스트 선정 및 세부규정의 제정은 IMF와 FSF 감독 아래 OECD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²⁰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금융기구가 국제금융질서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화의 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이익에만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에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배구조를 개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까지 IMF 의결권을 조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지분이 증대될 전망이다. 세계은행도 2010년 4월까지 지분, 의결권, 발언권, 내부 지배구조 등을 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²¹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정책을 동결하기로 선언하였으나 각국의 보호주의조치로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G20 국가 중 17개 국가가 1차 회의 이후 47개의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하였고, 2009년 2월 미국의회가 자국산 철강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을 통과시켰다. 경제위기 진행과정에서 과거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선진국들이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고 있는 배타적인 보호주의적 입장은 향후 WTO 체제 준수 여부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표 II-5> 참조).

19.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에 대한 이슈는 독일과 프랑스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원래 미국은 규제에 반대하는 월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스템 자체의 부정보다는 규제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번 금융위기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을 압박하고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20. 정무섭, 『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내용과 시사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pp. 2~3.

21. 위의 책, pp. 7~9.

● 표 II-5 금융규제 관련 G20 세부 이슈별 합의사항

이슈	합의사항	추가 논의사항
감독시스템 구축	·G20 국가들의 FSF 가입 완료 ·IMF와 FSB의 권한 강화 ·공동감시단 설립 ·IMF와 FSB의 조기경보체계 구축	·지배구조와 감독체계에 대한 합의 ※한국입장에서는 G20 위상제고 위해 G20 중심체제 구축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규제	·헤지펀드 위험정보 공개 ·헤지펀드와 매니저 등록 의무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등록의무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표준화, 건전한 보상체계 마련	·구체적 규정 수립
조세회피 규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조세피난처의 지정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방안
BIS 규제	·BIS 규제는 현 수준 유지 ·경기 확장기에 규제 강화	·확장기 규제강화의 구체적 방안

자료: 정무섭, 『2차 G20 정상회의 타결내용과 시사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현재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국제거래에서 호환성 있는 통화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은 환율 불안정과 국제 통화공급의 결핍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기축통화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브레턴우즈체제에서 달러는 금과 태환이 가능했으나, 1973년 태환불능 중단으로 미국은 통화창출에 따른 주조이익(Seignorage Profit)을 독점해오고 미국이 처한 경제위기를 타국에 전가한다는 불만이 증대해왔다.²²

²²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미국은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고 정치적 신뢰가 존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화스왑을 제공하고 그 외의 신흥국들에게는 새로운 신용공급제도(new arrangement to borrow)를 도입하여 필요 시 통화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규모나 조건 면에서 신흥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의 Brics 국가들이 달러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4월 런던에서의 G20 회의 개최 직전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周小川)은 “기축통화로서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폭넓게 활용할 것”을 제의하고 “현재 처럼 금융위기가 만연하고 국제통화제도의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표출되는 시기에는 범국가적이며 통화가치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²³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周小川)은 기축통화를 공급하는 국가가 통화가치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및 세계 경제의 성장에 수반되는 ‘통화공급증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국가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통화의 공급은 국제수지의 적자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통화의 신뢰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1950~60년대 미국은 다른 경쟁국보다 우월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이것을 다시 서유럽국가, 일본 등에게 자본수출, 원조 등의 수단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였다. 그 후 미국은 생산조건의 일반화로 발생하는 무역적자에 의해 세계에 유동성 공급을 해왔으며, 또 다시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한 달러환류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금융위기에 처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기능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는 오히려 요지부동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경제가 회복하지 못

²³. 『중앙일보』, 2009년 3월 24일.

하고 쇠퇴한다면 기축통화로서 미국달러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기 쉽다. 미국이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를 신자유주의적 방식에 의한 달러유입에 의해 보전하지 않고 달러의 가치저하를 통해 해소한다면, 달러의 가치저하는 달러의 신뢰상실은 물론, 세계경제에 대한 유동성 공급부족으로 세계경제침체를 가져온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가중되면 국제 유동성 확보요인 때문에 달러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 달러 기축통화 문제가 국제경제질서 개혁에 관한 핵심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미·중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국가위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Pax Americana의 패권국 미국은 세계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불명예 때문에 경제적 리더십이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미국은 경기침체회복을 위하여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를 요청하였으나 유럽국가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는 달러의 기축통화개혁을 요구받는 한편, G20에서 금융규제를 중용받음으로써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세계화 추진을 멈추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규제의 완화를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써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금융지배를 강화해 온 미국의 경제전략에 일대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주도하며 금융산업의 수익모형을 제공해 온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장치의 도입요구에 따라 미국의 금융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의 제조업도 효율성 하락에 따른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서 미국경제의 국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중심의 미국의 발전모델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수익모형을 창출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

I
II
III
IV
V

다. 또한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경제위기로 세계 최대의 단일 소비시장의 기능이 제한받게 되었다. 더욱이 미국 주도하에 있었던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의 구조개혁으로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IMF 등 국제경제기구의 개혁을 앞당김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 유럽 등의 반대로 기축통화 개혁주장에 대한 중국의 시도는 무산되었으나, Brics 등의 경제신흥국의 지원을 얻어서 세계경제 파워그룹으로 부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은 글로벌위기 중에도 6%가 넘는 경제성장을 시현하였고 2009년 다시 8%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연계관계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변의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서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등의 성장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4조 위안(5,851억 달러)의 자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에 투입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분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지정하고 자국의 성장만이 아니라 역내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겠다는 정치의도를 발표함으로써 역내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4분기에 40%가 넘는 높은 수출감소율을 보였고 경제성장이 이미 마이너스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엔화가 국제통화인 까닭으로 일본경제는 직접적으로 금융위기에 노출되지 않았고, 통화가 평가절상되어 수출과 국내경제의 회복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변국의 경제안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 오히려 일본은 엔화의 캐리트레이드로 동아시아지역에 투자되었던

일본계 자금이 본국으로 회수되도록 방치함에 따라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불안을 초래하는 등 역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경제는 단일시장의 규모면에서는 미국에 앞서는 가장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내부의 국가별 시장이 아직도 상호 다른 규제 및 제도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서 국가별 시장 간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기에 국가 간 여건의 차이로 인해 단일 위기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제도적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아서 시장이나 단일통화의 영향력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G2로 평가받는²⁴ 등 세계에서 경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종래 미·중 경제관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왔으나,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양국의 경제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현재 양국 간 ‘대등한 관계’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양국관계가 종전과 같지 않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12월과 2009년 7월에 개최된 『미·중 전략 경제대화』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변화된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과거 양국 간의 회담은 주로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훈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회담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과 채권국 사이의 만남으로서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고 미국이 중국의 호의를 기대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미·중 전략 경제대화』는 부시 정부 시절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매년 『미·중 전략 경제

²⁴ 국제전략연구소(CSIS) 등의 미국 워싱턴 소재 주요 연구소들은 21세기 글로벌 경제패권을 미국과 중국중심의 G2 체제로 인정하였다. 최근 2009년 4월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개최된 G20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패권이 기존의 미국, 유럽중심에서 미국, 유럽, 아시아중심의 삼극체제로 변화하는 과도기 체제로 볼 수 있다.

I
II
III
IV
V

대화』에서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폭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상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공세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미·중 전략 경제대화』는 위안화 환율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대화시작 전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된 중국자산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기를 희망한다”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특히 2009년 개최된 『미·중 전략 경제대화』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려 든다는 여론이 일부 존재하고, 미국에서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면서 “나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맹자의 『진심』에 나오는 경구를²⁵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중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선언했다.²⁶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왕치산 부총리가 대독한 개막사에서 “세계 평화와 발전 등 주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어께가 무겁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모두 미국과 중국이 풍랑 속에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미·중 전략 경제대화』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09년 7월 현재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 가운데 약 1조 6천 5백억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

25. “산중의 지름길을 계속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지만, 얼마 동안 다니지 아니하면 풀이 우거져 막힌다.”(山徑之蹊間介然用之而成路，爲間不用則茅塞之矣)

26.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at-the-US/China-Strategic-and-Economic-Dialogue> (검색일: 2009.9.22).

가운데 8천 15억 달러 상당의 미국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양국은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이나 달러 기축통화의 유지여부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들에 집중,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뉴욕 타임스는 2009년 7월 28일 미국이 중국의 통화정책 등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며, 막대한 공공부채를 짊어진 미국이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화가 미국과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인 ‘G2(주요 2개국)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G2 시대의 도래는 미국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점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미 달러패권이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시장 국가들로부터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통화인 달러화가 더 이상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이미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기축통화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촉발시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사회(FRB)가 경기부양용 자금으로 달러를 찍어 직접 매입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달러화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폭락하게 되었다. 미국국채의 최대 보유국가인 중국은 자국 달러자산의 가치하락을 우려하게 되었고, 한발 더 나아가 IMF 특별인출권(SDR) 논리를²⁷ 앞세워 기축통화 논쟁을 야기하는 등 이러한 달러위기를 기회로

²⁷. 중국이 내세우는 특별인출권(SDR)의 아이디어는 1971년 통화위기에서 미국 닉슨 행정부가 먼저 제안했다. 즉, 금 태환의 폐기에 대한 각국의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닉슨 행정부는 ‘세계통화개혁회의’를 창설하도록 지원하고, 국제통화기금(IMF)내에서 G20(group twenty)으로 하여금 1971~1974년에 걸쳐 새로운 국제통화질서의 개혁작업을 하도록 주선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IMF 특별

I
II
III
IV
V

위안화의 기축통화 작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의 대체는 단기간에 혁명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는 점을 영국파운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이 패권을 잡은 후에도 30년 이상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 기축통화의 패권 확보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에 공세를 펼 것이다. 동아시아 역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역경제통합을 이룩하고 이 역내 시장에 위안화를 결제수단으로 활용, 미국의 기축통화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에 대해 미국도 달러화 패권방어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축통화 쟁투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달러화 신뢰추락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역내 단일통화권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촌의 주요 경제블록들이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화 대신 자국통화를 사용하거나 주변국들과 함께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 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등 통화블럭이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역거래 시 달러화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A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정상회의(23~24일)를 열고 무역결제 때 회원국들의 통화사용을 확대하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유사한 남미은행을 2010년에 정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2008년 10월부터 무역대금 중 일부를 자국통화로 결제

인출권(SDR)이 국제통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달러화는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제통화체제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닉슨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실제 실행하지 않았다. 1973년 오일 쇼크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국제통화질서의 새로운 집단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하고 있다.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도 2010년 말부터 자국통화를 무역결제에 사용키로 했으며 칠레와 콜롬비아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중동 산유국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는 2009년 6월 초 ‘중동판 유로화’를 만드는 ‘통화동맹’ 창설에 합의했다. GCC는 2010년까지 단일통화를 만들어 유통시킬 계획이다. GCC 회원국들의 석유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45%에 달하는 만큼 역내 단일통화가 생길 경우 달러화의 지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주축으로 한 중화권도 2009년 무역거래에서 달러화 대신 위안화 사용을 시작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이후 상하이 일렉트릭그룹 등 일부 기업이 홍콩과 인도네시아 업체들과 위안화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결제수단으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위안·루블화 결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중국과 홍콩은행 간에도 무역대금의 위안화 거래가 시작됐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달러화 의존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 공동통화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아세안 지역에서 역내 통화의 창설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달 6일 르완다와 부룬디가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관세동맹에 가입하면서 역내 단일통화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²⁹ 최근 세계 경제권들이 역내 통화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28. 『경향신문』, 2009년 6월 19일.

29. 『중앙일보』, 2009년 7월 28일.

I
II
III
IV
V

확산과 달러화 의존탈피 움직임을 들고 있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등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이 매수함으로써 미국의 자금조달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 채무증가에 따른 달러약세와 달러화 자산보유가 가져올 손실에 대한 우려로 중국 등의 신흥국가들은 미국의 국채와 달러화의 자산매입을 꺼리면서 미국 기축통화의 위상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글로벌 증시에도 재현되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3년 이내에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 2009년 7월 28일 현재 중국 증시(상하이·선전시장)의 시가총액 규모가 약 3조 4,553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의 외연확대 추세로 볼 때 미국 뉴욕 증시(시가총액 11조 6,975억 달러) 추월은 시간문제라고 분석한다. 상하이·선전시장의 기업공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중심의 차스닥(중국명 創業板)을 선진 시장에 설립하고,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중심의 외국기업만을 상장하는 국제기업시장을 상하이 시장에 개설하는 등 주변시장을 키우려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 글로벌 증시에서도 G2(미국·중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경제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지난 2004년 이래 제기되기 시작한 ‘베이징 컨센서스’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IMF를 통해 1990년대 초반 구축된 신자유주의 발전전략, ‘워싱턴 컨센서스’를 개발도상국에 강요하였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를 채택한 남미에서는 경제발전이 미흡하여 대부분 반미정권이 집권하는 등 사실상 파산한 상태다. 물

30. 『중앙일보』, 2009년 7월 29일.

론 그 결정타는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이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사회적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하였다. 2004년 타임지 국제관계 논설위원 Ramo가 명명한 ‘베이징 컨센서스’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합의가 없으나, 중국식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모델’로서 국가의 지도 아래 점진적·단계적 발전전략을 강조하고 각국이 독자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대외정책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전전략의 제시 및 결정은 시장만능주의 및 국제기구의 간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경제주권과 정치·군사전략의 내정불간섭을 포함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의 발전모델로 불리는 베이징 컨센서스는 개도국 발전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 심장부, 월가에서 발생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G7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G2(미국·중국),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듯이 미국과 중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 냉전시대의 한 축이었던 소련에 비견될 정도로 중국의 파워가 부상하고 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신경제’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미국의 단극적 파워에 견주어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중국의 부상이 진척되고 있다.

세계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들 사이에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 수습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겠지만, 패권적 경제질서가 균열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국제체제를 놓고 패권국과 경쟁국 사이에 패권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리기의 ‘세계체제론’에 의하면 금융위기와 더불어 세계패권질서의 변화가 추동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아리기는 “장기 20세기를 세 국면의 구성으로 재개념화했다. 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금융적 팽창. 이 과정에서 ‘낡은’ 영국체

I
II
III
IV
V

제의 구조가 파괴되었고, ‘새로운’ 미국체제의 구조가 탄생하였다. ②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실물적 팽창. 이 시기에는 무역과 생산의 세계적 팽창 속에서 ‘새로운’ 미국체제의 우위가 관철되었다. ③ 현재의 금융적 팽창. 이 과정에서 이제 ‘낡은’ 체제가 된 미국체제의 구조는 파괴되고 있고, ‘새로운’ 체제의 구조가 탄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고 언급하였다. 세계경제가 1929년도의 대위기에 직면하여 영국 헤게모니 Pax Britannica가 붕괴되고 각 민족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대외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시발로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치닫는 상황을 뒤돌아보면 자본주의발전과 헤게모니와의 상관관계는 최소한 경험적으로 논증되어진다.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단극적 위상은 일정기간 유지되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안보적 위상과 경제적 위상 사이의 괴리는 향후 세계질서의 구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단극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패권국 미국이 경제적 입지의 축소를 만회하려는 세계전략은 중국 등 경쟁국의 맞대응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제체제의 카오스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중국의 군사력 신장

냉전종식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정세하에서 1990년대 후반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의 유기적 통일을 지향하는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³¹ 조반니 아리기, 백승욱 옮김,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시대의 기원』, p. 18.

안보전략”³²이 출현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중국의 지도부는 국가전략에서 종합적 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한 반면, 군사력은 경제발전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공업, 농업,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군사력 현대화와 같은 국방부문은 상대적으로 국가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지도부의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경제발전과 국방현대화를 병행추진하는 국가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걸프전 이후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 1995년과 1996년의 대만사태, 미국의 전역미사일 방위체계(TMD) 구축, 1999년 5월 코소보전쟁에서의 미국공군의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폭격사건 등을 계기로 미국 패권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제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대외전략을 확정·추진해 나갔다.³³ 평화로운 국제환경은 현대화 달성에 필요조건이지만, 평화로운 국제환경은 국방현대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인권문제, 미국의 MD 체제 구축, 미·일동맹 강화 등이 모두 미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정책 기본방향은 모두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 주도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을 새롭게 출현시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공식적인 국방예산을 두 자리 숫자로 증액시키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때문에 국방예산의

32. 葉自成,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關於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1期), pp. 5~10.

33. 이태환, “중·미관계의 변화,” <<http://www.eastasianstudies.org>>.

I
II
III
IV
V

운용에 제한을 받겠지만,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국방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6>에 의하면 2009년도 중국 국방비는 미국 6,512억 달러에 이어서 702억 달러로 세계 2위로서 세계 국방비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2007년 중국의 국방비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3배 정도 많은 1,39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GNP 대비 중국 군사비 비중은 미국과 유사한 3.5%에 이르며, 구매력 기준 국방비 비중은 아시아 최대규모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³⁴ 이처럼 중국 정부의 발표치와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군사대국화 추진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국방비를 단지 일반적 운영유지비에 한정하고 무기구입비나 연구개발비와 같은 전력증강비는 다른 분야 예산에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07년 GN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미국의 4.6%에 못 미치는 1.4%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대부분이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치중되어 있고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위한 예산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및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³⁵

³⁴- Anthony H. Cordesman,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2*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2); 미 중앙정보부는 3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4배,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는 4.5배, 미 랜드연구소 울프(Charles Wolfe)는 20배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호, “중국의 정치군사적 성장과 향후 전망,” 『현대중국』, 창간호(카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중국연구센터, 1997), p. 95.

³⁵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표 II-6 세계 주요국 국방비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금액	비율	비고
미국	651,163	44.30%	2009년
중국	70,243	4.78%	2009년
EU	312,259	21.24%	2008/2009년
일본	48,860	3.32%	2008년
러시아	34,000	2.31%	2009년
인도	32,700	2.22%	2009/2010년
한국	28,500	1.94%	2008년
브라질	23,973	1.63%	2009년
기타	268,303	18.25%	-
세계총계	1,470,000	100%	2008년

자료: CIA, *World Factbook*, 2008.

이라크 전쟁 개전 직후인 2003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는 ‘세계 군사혁신의 발전태세’라는 주제의 당 학습활동에서 ‘도약식 발전’이란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과학기술진보의 기초 위에서 국방 및 군대현대화의 도약식 발전실현’을 다시 강조했다. “선진국들에 비하여 중국의 군사혁신 추진은 특수성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군사혁신 이전의 기계화가 완성됐으나 중국은 그 단계가 완성되지 못한 가운데 정보화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침내 제16차 당대회에서 이른바 ‘중국 특색의 군사혁신’으로 규정된 군 현대화의 ‘도약식 발전’ 요구가 제기됐다.

사실상 개혁·개방 이래 ‘과기강군(科技強軍)’ 중시의 지침하에서 중국군 무기장비의 전반적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었다. 신기술 성과들

통권 37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p. 11.

이 무기개발에 운용돼 신형무기의 연구개발 및 실전배치가 이루어졌다. 중국군은 적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선진 작전수단을 보유하고으로써 현대전 능력이 보다 제고된 가운데 ‘고기술 국지전쟁’ 승리를 위한 물질적 및 기술적 기반이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래전을 ‘첨단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으로 상정하고 정보화 조건하에서 국지전 승리전략을 군사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핵억제력을 확충하여 상대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하고,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을 「과학기술 강군」 기조 아래 정보화·현대화하여 군사력의 원거리 투사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원거리 적 극방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본토 및 해안방어’에 국한된 군사전략으로부터 ‘적극방어 및 지역 세력투사’ 전략으로 전환하여, 2010년까지 동지나해 및 남지나해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갖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군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훨씬 약한 전략 핵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탄도미사일 개발,³⁶ 미사일의 다탄두화, 새로운 핵잠수함 기지건설은 물론, 잠수함 탑재전략³⁷ 및 전술 핵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는 주로 조기경보 능력,³⁸ 공군

36. 중국은 핵 억지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등평-31(8,000km), 등평-41(12,000km) 2012년 배치 예정이며, 등평-31 개량형으로 쥐랑-2 SLBM을 개발하여 2010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37. 중국은 094형 진(晉)급 전략 핵잠수함(12,000톤 급)을 2008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잠수함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0~10,000km 탄도 미사일(SLBM) 쥐랑(巨浪)Ⅱ호 12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은 미국의 오 클라호마급 핵 잠수함에 필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향후 094형 전략 핵잠수함 5척을 보유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7월 25일.

38. 2008년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쿵징(空警-2000) 대형 조기경보기의 생산을 시작하여 공중조기경보기(AWACS) 양산체제를 갖추었다고 보도하였다. 이 경보기는 5천~1만km 상공에서 반경 400km 이내의 목표물 수십 개를 한꺼번에 추적, 중국

력과 해군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군력 향상을 위하여 중국은 제3세대 전투기 쟈-10의 양산체제에 진입하였고, 제5세대 최첨단 전투기 J-13/J-14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략폭격기(TU-22/95)를 도입하거나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대만을 겨냥하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 중에 있으며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 다양한 유형의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MD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우주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1월 11일 중국은 인공위성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약 극(極)궤도 기상위성을 요격·파괴함으로써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인 위성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떠올랐다.³⁹

중국은 해군력 향상을 위하여 2016년까지 3척의 항공모함전력을 실전배치할 예정이고,⁴⁰ 역내 사태 발생 시 미국 항모의 군사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력개발의 일환으로 미국의 항모와 함정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탄도 미사일 동풍(東風)-25를 개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풍(東風)-21 미사일에 적외선 탐지장치를 장착하고 사거리를 확장한 동풍(東風)-25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될 경우 태평양 지역 배치 미군기지, 함정 및 동북아 대부분이 사정거리 내에 들게 된다(<표 II-7> 참조).

동북부에서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 『2008-2009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p. 40.

³⁹ 한국국방연구원, 『2007-2008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8), p. 35.

⁴⁰ 중국은 2006년 항공모함 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첫 번째 항공모함이 진수되어 2014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고, 2016년 두 번째 항모가 실전 배치되는 등 향후 10년 이내에 3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로부터 항모 탑재용 수호이-33 전투기 50대를 수입하는 등 55억 달러의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7년 12월 31일.

표 II-7 2020년 예상 중국 군사력 규모

구분	내용
지상	전차 6,000, 장갑차 6,000, 야포 12,000문, 헬기 380대 등
해상	전투함 70여 척(구축함 30척, 호위함 40척), 잠수함 70여 척(전략핵잠수함 6척), 항공모함 3척, 항공기 600여 대
공중	전투기 2,000대(SU-27·30계열 500대, J-10 500여대, J-13/14 100대, FC-1 250대 등), 공중급유기 30여 대, 전략폭격기 240여 대
C4ISR	조기경보기 8대, 정찰위성 40여 기
전략무기	ICBM 220기, SLBM 30기, 전략폭격기 30대 등

다. 중국의 패권국가 부상의 제약요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1979년 개방 이후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9.8%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78년부터 1992년까지의 개혁·개방 1기에는 연평균 9.39% 성장률을 보였으며, 1993년 남순강화 이후 2001년까지는 9.42%,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10.49%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 기간에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3.1%였으며, 유럽은 2.2%, 미국은 2.5%, 일본 3.1%의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은 미국중심 국제체제가 갖는 불균등 성장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고,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상으로 중국이 미래에 영국, 미국 등이 구가했던 것과 유사한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월등한 생산성,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자국통화의 세계기축통화 활용, 엄청난 규모의 내수시장을 통한 세계경제의 성장주도, 국제질서 이탈국가에 대한 정치군사력을

통한 응징, 민주주의 발전모델의 제시 등을 통하여 미국중심의 국제 체제를 구성하였다.

●표 II-8 주요국 GDP(2008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GDP	14조 2천 억 달러	3조 9천 억 달러	4조 9천 억 달러	3조 7천 억 달러	9천 3백 억 달러
GDP (구매력지수기준)	14조 2천 억 달러	7조 9천 억 달러	4조 4천 억 달러	2조 9천 억 달러	1조 4천 억 달러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July 1, 2009.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중국의 GDP가 3조 9,000억 달러에 이르게 되면서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3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8>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중국 GDP는 7조 9천 억 달러를 기록하여 9% 전후 성장률 및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를 감안하면 10년 전후로 중국 경제력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따라 잡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¹ 미국 의회 산하의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2006년 보고서를 통하여 구매력지수(PPP)로 평가 시 2013년경이면 중국 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고 2025년에 이르면 미국 GDP를 59%나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⁴² 과거

41.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왕전화, “미국 달러화 패권과 경제위기.”)에 의하면 중국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8% 전후로 꾸준히 유지하고, 미국이 2% 정도의 저성장 에 머물면 2018년경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 등이 고속성장을 하게 되면 아시아 GDP는 2030년 경 전 세계 GDP의 53%를 차지할 것이지만, 미국, 유럽 국가들은 33%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매일경제』, 2009년 7월 26일.

42.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이 될 때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샤오강(小康)사회를 실현하고 신 중국 건립 100주년(2049년)이 될 때 부강한 민주적 문명을 가진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장기목표를 제시하였다.



IBRD(세계은행)은 2020년경에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분석했으나,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로 이러한 시간적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3억여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 수입능력, 높은 저축률 등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중국의 저력으로 보아서 구매력 지수로 평가한 GDP은 3~4년 이내에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9 세계총량 대비 중국 주요지표 비중(1820~2020년)

시기	인구	GDP	수출	제조업 생산
1820	36.57	32.88	-	29.8
1870	28.15	17.05	2.49	16.1
1913	24.40	8.83	1.78	3.6
1929	21.28	7.37	1.87	3.4
1950	21.66	4.50	1.69	2.3
1973	22.52	4.62	0.65	3.9
2005	20.74	14.01	7.5	21.1
2020	19.50	18.5	13.0	25.0

자료: Paul Bairoch, "International Industrialization Levels from 1750 to 1980,"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Vol. 11, No. 2 (Fall 1982), pp. 269~335; Angus Maddison,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Paris (OECD, 2006);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 2006* (CD-ROM), 민홍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성홍·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 (서울: 오름, 2008), p. 121 재인용.

세계 GDP에서 중국은 1973년 4.62%에서 2005년 14.1%를 차지하고 2020년경에는 18.5%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중국은 2007년 수입과 수출에서 각각 세계 3위와 세계 2위의 무역대국의 자리에 올랐다. 또한 세계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7.5%에서 2020년 13% 수준으로 증대하고 제조업 생산도 21.1%(2005년)

에서 25%(2020년)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 집단은 추정하고 있다 (<표 II-9> 참조). 또한 <표 II-10>이 보여주듯이 중국이 2000~2005년 세계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중은 약 29.6%를 기록하였고, 이 비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세계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비율은 최근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표 II-10 중국의 세계 GDP 증가량에 대한 기여도(1980~2020년)

시기	2000년 국제달러(PPP)	2000년 불변가격(시장환율)
1980~1990	11.5	4.1
1990~2000	26.1	9.7
2000~2005	29.6	15.3
2005~2020	>1/3	19.6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CD-ROM;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CD-ROM.

중국은 경제력 증대, 역내 시장에서의 중요성 증대, 자본증가 등의 요인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역내 통화 통합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급속한 구매력 증가로 지금까지 누리왔던 생산중심지의 지위를 탈피하여 소비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수행했던 패권기능은 향후 중국이 꾸준히 발전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 우선 19~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에서는 유럽, 미국, 중국, 인도 등이 함께 세계적 부의 생산을 균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전 지구

I
II
III
IV
V

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한 국가가 고도의 생산력발전을 독점하거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전성기 시절과 같이 50% 전후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5년의 경우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내외, 독일은 8% 전후, 미국은 수입 16.5%, 수출 8.9%를 기록하였다(<표 II-11> 참조).

● 표 II-11 주요국의 상품수출입액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1980~2005년)

	중국		독일		인도		일본		미국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1980	1.0	0.9	9.1	9.5	0.7	0.4	6.8	6.4	12.4	11.1
1990	1.5	1.8	10.0	12.2	0.7	0.5	6.6	8.3	14.6	11.4
2000	3.4	3.9	7.4	8.6	0.8	0.7	5.7	7.4	18.8	12.1
2005	6.3	7.5	7.4	9.6	1.3	0.9	4.9	5.9	16.5	8.9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6*, CD-ROM.

비록 중국이 향후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증대시켜 가겠지만, 독일, 미국, 일본, 인도 등과 세계무역을 균점해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 위안화가 세계기축통화가 되거나 독자적으로 방대한 내수시장 진작을 통하여 패권국의 동의기능을 행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향후 단극을 이루는 패권적 세계질서의 주역이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된다는 사실은 최소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비례적으로 커지면서 세계경제가 점차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는 패권적 경

제질서가 성립되기보다는 다극화 경제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G20 런던 정상회의의 폐막식에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이번 세계경제위기의 해소과정에서 취해질 국제금융 체제의 개혁으로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퇴조,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대국의 부상, 미국의 경제패권주의 퇴조 등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전망이다. 최소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질서의 다극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시대를 알리는 ‘Chimerica’, ‘G2’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나,⁴³ 중국 전략가들은 이러한 용어사용에 매우 신중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중국의 종합국력이 미국에 비해 훨씬 미약하기 때문에 ‘Chimerica’, ‘G2’ 개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식한다.⁴⁴ 원자바오 총리 역시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중·유럽연합 정상회의 당시 중국이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공식적으로 G2 개념을 수용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중국과 미국이 세계를 함께 관리해 나가는 구상과 Chimerica 개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실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중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이 강하다. G2 체제가 구축되면 중국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우려

43. ‘Chimerica’, ‘G2’ 용어는 최근 미국 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하버드대학 버거스텐 교수가 중국과 미국을 이익공동체로 규정하고 양국이 세계경제 체제 내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논지를 제시하였고, 오바마 외교고문으로 활동했던 브레진스키도 중·미 관계정상화 30주년 기념 차원에서 베이징 방문 시 중국과 미국이 경제무역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세계경제 발전과 평화유지에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Chimerica 개념을 언급하였다.

44. 李長久, “國際格局短期內不會發生根本性變化,” 『現代國際關係』, 2009年 第4期, pp. 12~13.

I
II
III
IV
V

하는 한편, 중국이 미국과 함께 반패권·반제국주의 운동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으며, G2 패권체제 형성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약화되어 다극적 국제질서 수립에 부정적 영향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⁴⁵ 특히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 전략가들이 G2 개념을 거론하는 근거에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서 NATO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을 단결시키고, 중·러관계, 중·유럽관계는 물론 개발도상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을 중국의 가상 적국으로 만들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⁴⁶

중국은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적 경제질서를 구축하기보다는 세계경제질서를 다극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 G20 정상회의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通力合作, 共度時艱)면서 이번 금융위기가 중·미 간 협력강화를 통하여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경제분야에서의 성공적 협력은 다른 영역의 문제해결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언급하였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계속 ‘도광양회’ 전략을 견지해야 하며, 미국을 대체하여 국제경제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행보를 해서는 안되고 현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⁷

45. Jian Junbo, “China says no thanks to G2,” <<http://www.atimes.com/atimes/China/KE29Ad01/html>> (검색일: 2009.6.1); 王嶋生, “中國需謹慎,切勿妄言中美G2時代,” 『中國青年報』, 2009년 3월 3일.

46. 錢文榮, “G2 試圖將中國變成美國的附庸,” 『半月談』, 2009년 4월 28일.

47. 尚鴻, “金融危機對美國霸權地位的衝擊,” 『現代國際關係』, 2009년 第4期, p. 33.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 전략적 이익을 크게 가지고 있지만 강하지 않은 나라(大而不強)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대한 투자와 진출은 정치·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미국에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⁴⁸ 이번 금융위기는 중국에게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기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능력 범위 내에서 위기를 겪고 있던 국가에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8년의 금융위기는 세계적 차원에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한다.⁴⁹

이러한 시각에서 실제로 중국은 금융위기를 기회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통화스와프 체결, 내수 진작을 통한 주변국의 중국수출 증대 등을 통하여 지도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적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약화를 틈타서 국제경제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중국 전략가는 미국중심의 국제금융체계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금융제도 창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국제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이 경제적 패권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제체제의 다극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특히 이번 세계경제위기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48- 楚樹龍, “中國外交不必太高調,” <<http://www.huanqiu.com>> (검색일: 2009.3.11).

49- 邵峰, “金融危機對國際關係的影響及中國的應對,” 『世界經濟與政治』, 2008年第12期), pp. 23~25.

50- 鄭永年, “中國如何在G20定位國家利益,”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_ID=145816> (검색일: 2009.3.25).



필연적으로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1초(一超)’의 지위는 약화되는 반면, ‘다강(多強)’의 지위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유지시킬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단기간 내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므로 중국이 직면할 국제환경은 엄중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경제의 다원화가 중국의 전략이익과 중국의 부상에 부합되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⁵¹

● 표 II-12 중국의 세계 GDP 증가량에 대한 기여도(1980~2020년)

시기	2000년 국제달러(PPP)	2000년 불변가격(시장환율)
1980~1990	11.5	4.1
1990~2000	26.1	9.7
2000~2005	29.6	15.3
2005~2020	>1/3	19.6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CD-ROM;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CD-ROM.

이러한 중국 전문가들의 관점은 중국이 경제발전수준의 상대적 후진성, 기술력의 열세,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높은 경제력 수준, 미국의 패권유지정책 고수 등의 요인으로 Global standard 및 Rule의 제정자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의 국가전략으로서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00~2005년 동아시아 GDP 성장 기여율에서 중국이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성장률에서도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⁵¹ 江涌, “金融危機的影響與中國的對策,” 『世界經濟與政治』, 2008年 第12期, p. 13.

비율은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점차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무역, 투자 등의 관계를 매개로 경제적으로 포섭해나가면서 실질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화평굴기(和平崛起), 조화세계(和諧世界) 등의 대외전략을 통해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들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점을 전파하고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토대로 주변국들을 상호 의존관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대한 기여, 경제적 상호 의존도 제고 등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행사함으로써 세계의 다극화를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중국부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 정부 및 전문가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미국 정보기관(NIC)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⁵² 향후 15년 안에 G7 멤버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추월하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들로 구성된 다극적 세계질서가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유럽국들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도전을 받게 되는 반면, 중국과 같은 신흥대국들은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요구할 것이다. NIC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까지 국제질서가 변환과정에 진입하여 미국이 계속 우세한 지위(preeminence)를 차지하겠지

⁵²- NIC,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Mathew J. Burrows and Jennifer Harris, "Revisiting the Future: Geopolitical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2 (April 2009).

I
II
III
IV
V

만 지배적 지위(dominance)는 상실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로 이러한 국제질서의 개편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중국을 여전히 국제질서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현상유지세력(status quo power)으로 규정했다.⁵³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미국 내수시장의 소비자 역할이 제한되면서 중국과 같은 수출지향적 경제는 발전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나, 중국은 내수시장 지향적으로 발전모델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⁴

중국의 경제발전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국과 같은 후발국들은 일정 정도의 발전단계까지는 세계시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을 수입하여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으나, 기술적 격차가 줄어들면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개발은 권위주의적 시스템이 아니라 민주적 체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주화가 추진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⁵³- *Ibid.*, p. 28.

⁵⁴- *Ibid.*, p. 30; Roger C. Altman, "The Great Crash, 2008: A Geopolitical Setback for the West," *Foreign Affairs*, Vol. 88, Issue. 1 (January/February 2009), pp. 2~14.

● 표 II-13 중국이 직면한 4대 전환

유형	함의	도전	영향
경제 전환	지령성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경제성장의 불안정, 불균형, 인플레이션; 취업방식의 다양화, 비정규직화, 실업 및 정리해고, 시장실패	민중의 불안감 확대; 사회집단의 이익분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의 대가를 부담; 환경오염처리와 공공서비스의 결여
사회 전환	전통 농촌경제사회에서 현대도시 사회로의 전환	인구변동, 인구유동성 증가; 정보통제 이완; 새로운 사회조직 출현, 사회의식의 다원화	정보비대칭성의 증가; 탈산행위의 비용저하; 전통적인 사회화 메커니즘의 약화; 외부 이데올로기의 경쟁 심화
정치 전환	전통적 중앙집권정치체제에서 사회주의 민주체제로의 전환	당내 이익의 분화와 다원화 당과 사회집단과의 관계, 정부와 민간 관계의 긴장, 외부압력 증대, 중앙과 지방 사이의 대결	부정행위 성행, 정치·경제적 지대추구; 정부에 대한 정체성, 응집력 약화 집정의 합법적 기초 파괴
개방 전환	폐쇄·반폐쇄 사회에서 개방형 경제와 개방형 사회로의 전환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성 증대; 국제시장에 대한 영향 및 충격; 외부충격의 위험확대; 부분적인 주권의 양도	국내위기의 국제화; 손실 확대 효과; 국제적 충돌의 증가; 국제적 압력의 증가

자료: 먼훙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 p. 121 재인용.

더욱이 중국이 세계 헤게모니국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발전모델을 모방하는 소프트 파워를 통한 동의를 기능은 소지해야 한다. 우선 먼저 지적되는 점은 부분배의 지역적·계급적 불평등 증가 등의 사회적 요인은 물론, 권위주의 발전양식은 다른 국가들이 모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발전모델이 아니다. 중국 전문가가 <표 II-13>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은 자원의 상대적 부족 및 이용효

- I
- II
- III
- IV
- V

율의 저하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의존성 심화, 사회집단 이익분화, 정보 비대칭성 증가 등의 다양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발전모델이 1950년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수많은 국가들이 추종에 나섰으나, 현재 중국의 발전모델은 개도국 산업화 모델로 각광받는 ‘베이징 컨센서스’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추구하는 모델이 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도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발전모델이 패권적 발전모델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군대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보급과 지원이 취약하며, C4I상의 능력도 뒤떨어져 있는 등 세계최강 군사대국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향후 중국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역강대국과 구별된다. 핵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서태평양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지상군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적 우세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대미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공군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동맹 전력은 중·러연합 전력에 비하여 균형범위 내에서 약간 우세를 점하는 형태이므로 미·일의 중국 군사개입 시 중국은 군사력 균형을 위하여 러시아와 적극적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세력 중국, 러시아와 해양세력 미국, 일본의 전략적 대립이 지속될 경우 중국의 중·장기 국방현대화 목표들은 기술군대 및 군사혁신이 계속 강조됨으로써 그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중국은 군사혁신을 통한 현대전의 개념들을 자체 교리 및 전략에 반영하기 위하여 더욱 진력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보다 많은 자원이 군사에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도 중국은 힘의 배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에서 경제력 증대에 맞추어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지만, 단극적 패권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I

II

III

IV

V

Ⅲ.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미·중관계



1.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

냉전이 종식된 이후 동아시아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미·소 냉전 체제의 붕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중·소 간의 대결구조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 일본과 경제교류 협력관계를 확대해 가는 반면, 군사적으로 상호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범세계적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 기후, 에너지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정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 중동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협력과 대립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지역국가들의 갈등과 협력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크게 ‘낙관적 자유주의 시각’과 ‘회의적 현실주의 시각’으로 구분된다. 낙관론자들은 ‘자유주의적’ 모델에 기반하여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과 이 지역에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다자조직 및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현실주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는 회의론자들은 탈냉전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치변화는 국력의 변화와 세력관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성장과 경제적 상호 의존이 가져오는 ‘평화적 효과’를 강조하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

I
II
III
IV
V

한다.⁵⁵ 이들에 따르면 국가 간 무역확장과 상호 의존성의 확대는 서로 협력할 경우 누릴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증진시키는 한편, 확대되는 상호 의존을 관리하고 안정적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들 간의 평화적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낙관론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였음은 물론, 점차적으로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음을 중시하며, 이 지역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다자 조직 및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낙관론자들은 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 활동증대가 참여국가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안보적 적대감과 마찰의 위험성을 줄일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안보연계의 좋은 예이다. 중국은 역내 안보질서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대만과의 관계,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 군사력 증강 등의 요인들에 근거한다. 그러나 중국이 국익확보를 위하여 안보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포기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중국경제는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경제 속에 긴밀하게 편입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을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⁵⁶

⁵⁵-Ming Wan, "Wealth and Power: Economic Transformation of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8, No. 2 (Spring 1996), pp. 20~21, 69; James Richardson,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No. 38 (Winter 1994/95), pp. 28~39; 정진영,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동아시아 불안정론에 대한 비판,"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1997), pp. 153~186.

⁵⁶ 이호철,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보와 경제의 상호 관계," 『국제정치경제연구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에 힘입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상호 의존을 관리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제도화 시도 또한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이 증대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범과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규칙과 규범의 협상과 제도의 형성을 통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의 성공적인 관리가 진전되면 될수록 그 국가가 자국의 안보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APEC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⁵⁷ 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낙관하는 또 다른 이유로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이 역내 국가들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확산은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과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⁵⁸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는 힘의 균형과 그 평형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현실주의자들은 동아시아 미래를 회의적으로 예측한다.⁵⁹ 이들은 탈냉전기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힘의 다극화 양상은 국가들 간에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불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구』, 제1집 (1997.12), p. 55.

57- Woo Sik Kee, et al. (eds.),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s*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5).

58- Michael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59- 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pp. 5~24; Barry Buzan and Gerald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한국어 번역본 John J. Mearsheimer, 이춘근 옮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출판, 2004).

이들로 하여금 군사력 팽창에 더 매달리게 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특히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의 팽창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장차 아시아에서 현상변경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실주의자들은 경제적 상호 의존이 반드시 평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무역·투자·원조란 결국 권력정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불평등한 교역상대국 간에 상호 의존이 증대되면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일방이 핵심적 안보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상대국과의 경제관계가 아무리 긴밀하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불사하고 안보이익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일례로 대만과 중국, 미국과 중국이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만이 독립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대만을 위협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을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안보관계가 호전되어야 경제교류도 증대된다는 논리 아래에서 안보문제가 경제관계를 결정적으로 규정한다고 본다.

특히 공세적 현실주의론을 펴고 있는 미어세이머는 신자유주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역패권을 도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유한 중국은 현상유지세력이 아니라 지역패권을 성취하기로 결정한 공격적 국가이다. 이것은 부유한 중국이 사악한 동기를 지녀서가 아니라 어느 국가가 생존을 위한 전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세계의 지역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이 중국의 이익과 상관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미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다.”⁶⁰ 미어세이머는 중국이 점차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자신의 국익 확보를 위하여 미국의 패권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 부시 행정부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라이스 역시 역사는 현상유지세력이 패권국과 군사적으로 균등해지면 패권국에 도전하는 현상타파세력으로 변하는 수많은 사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현상유지세력이 아니라 수정주의세력이라고 주장하였다.⁶¹

현재까지의 미국의 대중정책을 분석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안보적 측면에서는 현실주의 시각이 병존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정책선택은 열려 있다. 중국의 국력신장을 인정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지역질서를 형성할 수도 있고, 경제적 개입정책을 취하다가도 전환점(tipping point)에 도달하면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⁶²

2.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대립과 협력의 불균형적 양극체제

한국 전쟁 후 냉전시기의 동아시아 질서는 소련, 중국, 북한으로 구성되었던 북방 삼각동맹과 미국, 일본, 한국으로 구성되는 남방 삼

⁶⁰- 위의 책, pp. 732~733.

⁶¹-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79 (Jan-Feb 2000).

⁶²- Hugh White, “The geo-strategic implications of China’s Growth,” Ross Garnaut, Ligang Song and Wing Thyee Woo (eds.) *China’s New Place in a World in Crisis* (Melbourne, 2009).

I
II
III
IV
V

각동맹의 균형적 양극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양극체제는 세력균형의 기본형 가운데 한 진영이 다른 진영의 현상타파전략에 대해 준비확충 등의 다양한 균형화 전략에 의존하여 상대의 패권 장악의지를 억지하는 직접적 대립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양극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간의 대립,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연합국과 주축국 간의 대립 등에서도 구현된 바 있다. 냉전시기 동아시아에서 양 진영의 세력이 대치했던 대표적 장소가 바로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던 한반도였다.

냉전시기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경제의 불균등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력전이 때문에 소련, 중국, 북한의 북방삼각동맹은 거의 붕괴되는 등 심각한 변화를 겪어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운영하였던 소련 및 중국이 서방과의 체제경쟁에서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북방삼각동맹은 약화되고 동아시아는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는 일초다강 구도로 재편되었다.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은 중국과 일본의 세력경쟁을 억제하고 중국을 서구중심의 국제사회로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가치체계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미국은 약화된 대륙동맹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하여 유연한 봉쇄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연성권력 행사를 통하여 중국의 체제변화를 도모하였다.

과거 헌팅턴은 미국중심의 국제체제를 미국의 패권이 구현된 단극체제가 아니라 일초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로 규정하였다. 미국의 힘의 우위는 문자 그대로 우위(preponderance)일 뿐, 지배(dominance)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이는 파악하고 있다.⁶³ 헌팅턴에 의하면 현재의 국제질서는 하나의 초강대국 미국과 다수의 강대국으로 구성되어 초강대국이 주요 국제문제들을 다른 강

대국들의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고, 또한 다수의 강대국들의 반패권동맹도 패권국의 행위를 저지할 수 없는 단·다극체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선 미국의 군사력이 현재 모든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다. 예컨대 미국은 재래식 전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2차 보복능력을 지닌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사이에는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전쟁발발 시 2차 핵 보복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상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이러한 2차 핵 보복능력을 없애기 위하여 MD를 개발하고 있으나, 러시아, 중국 등은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확고한 우위를 지니고 있는 재래식 전력 역시 미국 본토 및 특정 지역을 장악할 수 있으나, 전 지구적 차원의 수많은 전구를 지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⁶⁴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은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군사혁신(RMA)과 더불어 다양성(diversity), 유연성(flexibility),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등에 의거한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 이외에도 경제력에서도 불안정한 우위에 있다. 통합된 EU의 경제력은 미국의 경제력을 능가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2013년 전후에 미국의 경제수

⁶³- Joseph, Nye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4 (Winter 2002/2003).

⁶⁴- Barry Posen, “Command of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1 (Summer 2003), pp. 20~46.

I
II
III
IV
V

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현 국제질서는 일체화된 단극질서라기보다는 군사적 단극과 경제적 다극질서의 중층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⁶⁵

이러한 동아시아 일초다강구조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점차 양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⁶⁶ 헌팅턴이 언급한 일초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산업화 속도에 따른 국력분포 변화에 의해 위협을 받음에 따라 일초가 약화되고 다극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지리적 여건, 경제적 자급도, 약화된 경제력으로 인한 군사력 약화 등으로 강대국이 지녀야 될 전략적 자율성을 크게 훼손당하여 지역적 극(Pole)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⁷ 이와 유사하게 탈냉전 후 일본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력 규모, 강대국에 걸맞지 않는 약한 경제적 자립도, 대륙세력의 공격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리적 약점 등의 요인으로 지역적 극(Pole)의 지위를 점할 수 없을 것이다.⁶⁸

이에 비해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대륙세력을 대표하는 극(Pole)으로 점차 발전할 수 있다. 우선 2013년 전후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은 거의 균형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인구 측면과 부존자원 측면에서 극(Pole)의 지위에 걸맞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천연자원 부존량은 막

65. Joseph Nye,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장달중·임수호, "부시 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10권 2호 (세종연구소, 2004), p. 8.

66.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Spring 1999).

67. *Ibid.*, pp. 86~90.

68. *Ibid.*, pp. 90~92.

대할 뿐만 아니라, 석유 부존량은 고갈되어 가고 있으나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석탄은 내륙지방에 엄청나게 부존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의 14억 인구는 장기적으로 훈련된 저가의 노동력 공급 및 거대한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주요지표이다. 중국은 미국의 MD 추진, 일본의 재무장, 대만문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세적 정책추진, 중국 주변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및 포위 등 미국의 패권주의적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고도성장하는 경제력을 밑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충하는 등 세력균형 차원의 국방현대화로 대응하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전략적 균형을 아직 이루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군대는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보급과 지원이 취약하며, C4I상의 능력도 뒤쳐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역강대국과 구별된다. 핵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2차 보복능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서태평양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경제력 증대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핵전력의 균형은 중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제4세대 최신예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 항모,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 등의 해군전력 등 군수산업 전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2006년 발표된 QDR, NSS 보고서를 통하여 대서양과 태평양 간의 전력대비 비율을 역전시켜 60%의 전력을 태평양으로 이동배치한다고 발표하고 미·일동맹 강화, MD 구축 가속화 등을 행하고 있다.

I
II
III
IV
V

이 결과 동북아 지역은 미국의 잠수함, 첨단 해군함정, 미사일 등이 빠른 속도로 집결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의 이지스함 배치, 신형 미사일 개발배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소련 와해 후 처음으로 태평양 지역에 전략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해저에서 우주공간에 이르기까지 역내 강국들의 항모, 잠수함, 구축함, 미사일, 우주공간에서의 감시체계 등이 밀집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군사적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⁶⁹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대륙세력을 대표하고 중국과 해양세력을 대표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양극체제로 개편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패권동맹에 도전하는 중국중심의 반패권동맹을 결성하는 적극적 형태의 극(Pole)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현대화 등의 내재적 균형화 전략추진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형성, 다극화 전략에 기반한 동반자 외교를 통해 세력균형(balancing)을 도모하고 있는 등 하나의 극(Pole)을 형성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불완전한 패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완전한 패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대만분쟁 등과 같은 중요한 안보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⁷⁰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미국의 패권적 시도가 중국의 협조로 달성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중심의 패권체제가 아니라 미·중 중심의 양극체제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안보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포

⁶⁹- *Ibid.*, p. 16.

⁷⁰ 동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Michael Mastanduno, "Incomplete Hegemony: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Order in Asia,"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2003).

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은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상당부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는 과거 냉전시기의 진영논리가 아닌 준 진영적 양극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⁷¹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동북아 안보질서를 ‘역내 양극적 대립구도의 심화’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북아 지역 내에서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양극적 대립구도가 자리잡기 시작한다는 이미 오래되었다. 2006년도에도 미국과 중국은 상호 전략적 견제의 차원에서 상대방과의 전략적 관계를 운영하였다. 물론, 양국 간의 관계 전반이 대립적이며 대결지향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에 있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양국 간의 관계는 상호 의존의 영역이 지배적인 여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특히 군사적 영역에서의 관계는 보다 직접적인 대결과 상호 견제의 방향에서 진화되어 왔다.”⁷²고 한국국방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은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미국 독점의 전략적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는 아·태지역,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등 미국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러시아가 전략무기 확충을 지속하고 있으며, EU 역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국익과 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7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국양서원, 2005), pp. 20~25.

72.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p. 10.

I
II
III
IV
V

있다. 부시 행정부의 힘을 앞세운 패권적 세계전략은 다른 강대국들의 균형화 전략을 촉발시켜 오히려 세계질서가 다극질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 내부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미국 전문가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 집권 시기 미국중심의 단일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미국, 중국, EU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개편되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개의 세력들이 지정학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미국, EU, 중국 3강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각자의 비전과 질서에 동조하는 제2세계(the second world) 국가를 경쟁적으로 규합하는 21세기 신지정학적 게임이 시작되면서 누구도 서로를 지배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질서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본다.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은 지금까지 문화적 동질감을 보였던 서방세계 내부에서 형성되었으나, 앞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다문명적이고 다극적인 국제질서가 전개될 것으로 관망한다.⁷³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포괄적 대립과 견제의 양상을 지속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협력과 공생의 기회를 모색하는 노력들도 병행하였다. 2005년부터 중국과 미국은 고위 전략대화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동북아 차원은 물론 세계적 범위에서 양측 간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과 2009년에 개최된 「미·중 간 고위 전략대화」에서는 이란과 북한 핵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이와 같은 고위 전략대화를 해오는 것은 양측의 이해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상충되어 갈등과 긴장을 빚어냄에 따라 이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이며 중요한

⁷³-Parag Khanna, *The Second World, Empires and Influence in the New Global Order* (New York; Random House, 2008).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⁷⁴ 군사적 부문의 협력체제구축은 요원하지만, 경제부문에서는 2006년부터 『미·중 간 경제고위 전략대화』가 개최되어 세계경제운용에 대한 부분적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군사적 불균형성은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의해 시정되겠지만, 군사적으로 평가하면 전략적 균형을 이루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국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중국은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 아래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기술, 자본, 시장 등은 해외 의존도가 강하고 전략적 자립도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일초다강구도로부터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이 상호 대립하는 양극체제(unbalanced Bipolarity)로 변모 중이지만, 미국에 힘의 우위가 존재하는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볼 수 있다. 이 양극체제는 냉전시대의 미·소 양극체제와는 달리 세계경제를 매개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상 세계경제 제 문제를 협의하는 협력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군사부문에서 전략적 경쟁을 하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양극체제의 불균형성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군에 의한 공세적 전략을 유도하여 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길핀, 모델스키 등의 ‘패권안정론’에 의하면 국제체제의 안정성은 체제의 패권이 한 국가에게 귀속되어 있는 단극체제에 의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 반면, 세력균형론적 시각에 의하면 강대국 간 세력균형이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를 가장 잘 담보할 수 있을

74.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p. 71.

것으로 판단한다. 현실주의 세력균형론에서도 다극체제의 안정을 주장하는 학자(모르겐소, 카플란, 호프만 등)가 있는 반면, 왈츠, 미어세이머 등의 학자들은 양극체제의 안정성을 주장한다.

이 가운데에서 미어세이머는 국제체제를 불균형적 양극체제(unbalanced Bipolarity), 균형적 양극체제(balanced Bipolarity), 불균형적 다극체제(unbalanced Multipolarity), 균형적 다극체제(balanced Multipolarity) 등 4종류로 분류한다. 그는 균형적 양극체제, 균형적 다극체제, 불균형적 다극체제 등의 순으로 체제안정성 정도를 논의하고 있다. 가장 체제안정성이 위협받는 국제질서는 불균형적 다극체제로서 세력분포가 잠재적 지배국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제체제이다. 반면, 균형적 양극체제는 양대 진영 간 세력균형이 존재하므로 가장 안정적인 국제체제이다. 균형적 다극체제는 세력균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균형적 양극체제보다 국력변화 및 동맹변경으로 인하여 잠재적 세력불균형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다극체제는 잠재적 지배국이 등장할 지라도 몇몇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세력균형노력에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패권국의 등장을 억지하는 반패권동맹을 적기에 형성하기가 어렵다.⁷⁵ 또한 핵무기 보유에 의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은 다극체제보다 양극체제에서 오인(misperception)의 가능성을 줄이고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균형적 다극체제가 균형적 양극체제보다 훨씬 불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어세이머는 불균형적 양극체제가 현실세계에서 존재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는 불균형적 양극체

⁷⁵-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p. 22.

제의 세력분포가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⁷⁶

현재 대립과 협력을 거듭하고 있는 미·중 중심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는 그 불균형적 성격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다방면에서 대립과 모순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 일본, EU 간의 전략적 모순은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경쟁이며,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주로 안보적 차원의 모순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모순관계는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정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등의 경제, 동아시아 안보질서상의 안보, 중화주의와 미국식 예외주의의 충돌, 더욱이 급격한 세력전이로 인한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패권적 갈등 등 5개 방면에 걸쳐 있는 중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중중심의 양극체제야말로 다른 국가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패권갈등으로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간 충돌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게도 역효과를 가져다줄 요인이 많다. 미·중관계 악화는 미국기업들에게 투자기회 및 이익실현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중국소비제품으로 인한 미국시민들의 후생복지수준의 저하를 야기한다. 이외에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 채권은 미·중관계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로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테러리즘의 국제연대에 중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동아시아는 미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는 안보적 차원에서의

⁷⁶ John J. Mearsheimer, 이훈근 옮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p. 624.

I
II
III
IV
V

우선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아 및 유럽에서 특정 국가가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고, 더 나아가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안보를 위협할 경우 미국은 우선 역내 강대국이 잠재적 패권국의 출현을 저지해주기를 기다렸다가, 즉 위협의 책임을 역내 강대국에게 전가(buckpassing)하고, 역내 강대국의 패권저지에 실패할 경우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무력개입을 통해 파괴된 세력균형을 바로잡거나 미국 주도의 지역질서를 창출해냈다.⁷⁷

독일이 제1차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대륙에서의 지역패권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우선 프랑스, 영국 등이 독일의 패권추구를 견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자 전쟁에 즉시 개입하여 독일을 패퇴시켰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역패권을 도모했을 때에도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 무력 개입하여 일본을 패퇴시켰다. 또한 소련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도 미국은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하여 소련의 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소련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유럽대륙에서 강력한 국가연합체인 EU의 등장과 소련봉쇄를 목적으로 구성한 NATO를 소련붕괴 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미국의 주도하에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NATO 회원국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킴

77. 미어세이머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가 등장을 방지하기 위한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인(Christopher Layne)는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는 세계적 차원의 패권을 획득할 때까지 팽창주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어세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본질에 못 미치는 변종(diet version)을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위의 책; Christopher Layne, "The 'Poster Child for offensive Realism': America as a Global Hegemon," *Security Studies*, Vol. 12, No. 2 (Winter 2002/3), pp. 120~164.

으로써 미래 러시아의 지역패권 추구를 사전에 억제하고 있다. 더욱이 18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력 면에서 타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던 미국은 향후 2013년 전후에 중국에게 세계 1위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세력전이는 아시아 대륙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패권경쟁의 심화를 예고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세계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안보적·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미국의 잠재적 패권에 대한 도전 억제라는 사활적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미·중의 평화공존 가능성은 크지 않다.⁷⁸ 특히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해양세력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은 서남아시아, 인도양, 말라카 해협 등으로 이어지는 중동석유, 상품 등의 해양수송로(shipping lane)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양수송로가 중국에 의해 위협을 당할 경우 미·중 패권경쟁은 분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다. 해양수송로가 해양세력 미국의 세력균형적 차원의 사활적 이익이라면, 해양수송로에 근접한 한반도 및 대만 등은 사활적 이익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대륙세력 중국을 공세적 방식으로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 기능을 하는 핵심이익(core interest)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등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공략을 위한 전진기지를 설치하였다. 대륙세력 중국은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양세력 미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해양권익의 수호 차원에서 해·공군력 증강 등 군사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상적 대륙세력인 중국을

78. 예츠청,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 북스, 2005), pp. 358~361.

I
II
III
IV
V

제압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는 한편, 선제공격까지도 가정한 군사변환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봉쇄위주로부터 개입위주로 정책적 기조가 전환되었다. 세계금융위기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미국이 봉쇄정책 위주의 대중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개최된 「미·중 전략 경제대화」 개막연설에서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야망을 견제하려 든다는 여론이 일부 존재하고, 미국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면서 “나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미·중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선언하는 등 미·중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중관계는 경제협력에만 치중되었을 뿐, 군사·전략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의 균형화 전략과 팽창을 저지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2009년 8월 미국 16개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2009 국가정보 전략보고서」(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에 따르면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중국을 미국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한 데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과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자원외교의 강화와 군사현대화로 복잡한 글로벌 도전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⁷⁹

79. 『연합뉴스』, 2009년 9월 15일.

3. 향후 미·중관계 변화 유형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지역패권의 유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동의와 강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 랍시 헤게모니 개념을 국제정치적으로 적용하면 강제는 봉쇄정책(containment) 및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에 의한 전쟁으로, 동의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개입정책(engage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패권국가가 행사하는 정책은 동의와 강제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결합으로 나타난다. 순수한 봉쇄정책과 개입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등장한다. 동아시아에는 역내 세력 간 경제력 격차가 크고,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체제 간의 상이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냉전유산이 남아 있는 등 전략적 불확실성과 체제적 불안정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국가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강제기제를 통하여 지역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상정한 봉쇄와 개입의 다양한 정책조합을 구사할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의 최고목표를 지역패권국가 등장을 저지하는 데 두고 있다. 당연히 미국은 동맹관계가 있고 잠재력이 낮은 일본보다는 중국의 패권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미국의 공세적 대중정책에 대해 중국은 사용 가능한 대외정책수단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응적 현실주의(reactive realism)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되, 자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종합국력을 기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산출해내고 한반도 역시 그 영향권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I

II

III

IV

V

미국의 대중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중심의 패권안정질서가 동아시아에서 지속되기 어렵다면 미국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고립주의 정책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고립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방지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점증하는 상호 의존시대에 세계경제의 핵심축이 되어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고 철수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전무하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기조를 이어가지만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는 현재의 기조가 첫 번째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인식하여 중국의 전략적 국익을 존중하고 중국과 협력적 양극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미국의 두 번째 선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역패권의 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신 냉전체제를 형성하거나 예방전쟁과 같은 패권전쟁을 전개하는 것이 미국의 최악의 선택이다.⁸⁰

가. 미국중심의 패권안정

미국중심의 패권안정구도는 중국의 국력신장이 정체되고 미국의 국력은 발전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설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중국경제가 높은 성장궤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와 중국의 국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국의 패권이 지속되는 패권안정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안정적인 현상유지형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⁸⁰-Hugh White, "The geo-strategic implications of China's Growth," Ross Garnaut, Ligang Song and Wing Thyee Woo (eds.) *China's New Place in a World in Crisis* (Melbourne, 2009).

예측하는 패권안정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은 현존 지역질서의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등 사이에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현재와 유사한 일초다강체제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중심의 패권안정구도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서 산업화 이익을 향유하면서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이다.

미국 주도의 패권안정 시나리오는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따라잡는데에 실패하였지만 민주화되고 시장경제체제의 제도화가 실행될 경우 형식·논리적으로 설정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김우상은 중국이 민주화되고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로 변신하여 제반 역내 질서 문제를 미국과 함께 민주적으로 해결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중 간 세력전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분석한다.⁸¹ 중국이 민주화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지만 미국과의 국력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주도권은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제공하는 패권적 의미의 안보공공재로서 한·미 동맹, 미·일동맹 등의 조정이 수반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일초다강체제로 개편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일초다강체제는 체제·이념적 동질성의 강화로 대립적 요인이 사라지고, 국력상 미국의 우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패권안정구도 가운데 가장 안정성이 부여된 시나리오이다.

⁸¹ 김우상, “미·중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p. 19

I
II
III
IV
V

그러나 중국 국력신장의 정체, 중국의 민주화 등을 전제로 삼는 이러한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우선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연 9%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경제는 금융위기에 강타 당하고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이 기여하는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50%를 상회한다면 향후 중국의 국력신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가정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이면에는 이질적 정치체제 간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민주화 확대문제는 미국 대중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이 개입정책(engagement)에 의한 화평연변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를 도모한 것처럼 미국은 화평연변식 개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중국의 민주화 유도 시도는 단순히 중국의 민주화를 통한 이념적 토대의 동일화를 도모하여 미국중심의 패권안정을 꾀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민주화에 따른 자유화를 통해 소수민족의 독립, 빈부·도농·지역갈등 폭발 등을 야기하여 과거 소련붕괴 후 러시아처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려는 음모론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이 체제붕괴 없이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등장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러시아처럼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자유화된 중국으로 변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보다 용이하게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이러한 종류의 개입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부시 행정부에서 군사봉쇄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체제붕괴 없이 민주화를 도모하여 중국과의 갈등적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을 가정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산업화가 진척되면 민주화가 수반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개입정책에 의해 중국의 민주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미국중심 국제체제의 패권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민주화된 채,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준까지 발전했다면, 중국은 최소한 국제체제에서의 미국중심의 패권안정체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경제가 미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급기야 미국을 추월했다면 미국경제는 경쟁력 저하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재정적자를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게 패권적 지위를 넘기는 순간 달러 기축통화의 위상은 위안화에게 빼앗기고 미국중심의 패권안정체제는 종말을 구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 구축을 기반으로 세계적 주도력을 행사하고 민주화를 토대로 매력적인 발전모델을 세계 각국들에게 제시한다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도 패권적 동의를 기능을 행사하고 새로운 주도국으로 등장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권위주의체제가 민주화된다는 가정은 아시아 신흥공업국 민주화 과정이 시사하는 것처럼 일인당 국민소득이 최소한 5,000달러(1980년 불변가격) 이상이 되어야 설정 가능한 전제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중국의 민주화가 자유화를 수반하여 소수민족독립 등의 중국분열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개혁·개방에 따른 자유화 요구를 사회주의 법제화와 더불어 중화주의 등의 민족주의 담론을 통하여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민주화 과정은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개연성이 크지만, 단·중기적으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전제이다.

I
II
III
IV
V

다른 형태의 미국 주도의 일초다강구도는 미·중 간의 세력전이에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력 우위가 지속되거나 중국이 현 지역질서에 강한 불만족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불안정한 상태로 미국중심의 패권 안정구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안정은 중국의 사활적 안보이익(대만, 티베트)이 침해받지 않고, 미·중 협력이 중국의 경제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기대하에서 미국의 지역패권에 대한 중국의 묵인과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⁸²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국력분포변화의 반영에 의해 국제질서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유효한 지역질서구도의 예측에 불과하다. 불안정한 미국중심의 패권안정구도는 세력전이가 발생함에 따라 미·중 양극체제로 가기 쉽다. 결론적으로 중국 국력신장의 지체, 중국의 민주화, 미국 군사력 우위의 지속 등을 가정한 미국중심의 패권안정구도가 동아시아에서 형성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나. 협력·대립적 미·중관계

미국의 잠재적 도전세력으로서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해상관자로서 대우하고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기 회복문제, 국제금융질서 개편문제, 기후통화문제, 환경위기 및 기후문제, 핵 비확산 문제, 국제테러문제 등을 협력외교를 통하여 풀어나가는 개입위주 외교를 설정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초기

⁸² 황병무, “21세기 동북아 안보질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교수논총』, 제37집 (국방대학원, 2004) p. 25.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견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9·11테러 이후 반테러 협력적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대중정책을 전환하였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고 미국의 대중전략이 전환되면서 미국무부 차관 졸릭(Robert Zoellick)이 중국을 “책임있는 이익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언급하는⁸³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고 중국을 책임있는 대국으로 견인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정책은 제한적 규모의 군사적 봉쇄정책과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을 기반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의 추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의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증시킬 수 있다.

만약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이 병행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미국의 대중 개입정책이 실행되면 중국의 안보불안을 잠재워서 중국이 모든 국가역량을 경제발전에 진력하여 미국과의 국력격차를 보다 빨리 축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 NATO, 미·호주동맹

83.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것은 단지 지난 세기에 제정한 국제규칙을 조장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양국과 기타 각국들이 새로운 세기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자는 것이다.”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I
II
III
IV
V

등의 이완을 가져와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권은 물론 세계패권까지도 급속하게 잠식당해 중국의 패권체제 구축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에 대한 균형화 전략을 약화시키고 미국중심의 국제체제에 편승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우선 국력을 증진시키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힘의 우위를 지니고 있는 미국에 대한 균형행위는 값비싼 대가를 수반하므로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편승을 통해 힘을 축적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아세안 국가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까지도 주요 경제파트너로서 중국 편향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제한적 수준의 군사적 봉쇄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개입정책은 그 성격상 별로 추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제한적 수준의 대중 군사봉쇄정책과 병행하여 미국의 대중 개입정책이 실시될지라도 중국의 부상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 수준의 대중 군사봉쇄정책과 병행하여 미국의 대중 개입정책은 정책 비중이 제한적 수준의 대중 군사봉쇄정책에 있든지(부시 행정부) 개입정책에 무게중심이 옮겨졌든지 간에(클린턴 행정부) 이미 실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은 미국중심 국제체제의 특이한 구조 때문에 여전히 지속되었다.

미국의 대중 군사적 봉쇄정책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개입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 저지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명 났기 때문에, 중국에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로 지역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지역주도권을 중국에

게 완전히 넘겨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 개입정책을 추진하되, 군사적 대립을 적정 수준 유지하는 선에서 대중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 형태의 대중 군사봉쇄가 수반되는 개입정책이 미국에 의하여 추진되면 동아시아 질서는 협력과 대립이 교차하는 미·중 양극체제로 변모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대립과 개입정책이 결합되면, 미국과 중국의 정책선택 여하에 따라 차후 동아시아 지역질서구도는 협력적 형태의 미·중 양극체제, 대립적 형태의 미·중 양극체제, 또는 협력·대립적 형태의 미·중 양극체제로 변화할 것이다.

다. 협력적 미·중관계

향후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후기 부시 행정부의 개입정책을 한 층 더 발전시킨 형태로서 ‘포괄적 개입정책’을 동아시아 안보·경제지역 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구상·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포괄적 개입정책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 추진을 폐기하고 동아시아에서 안보·경제 공동체를 창설함으로써 중국을 동아시아 국제질서 내로 통합하는 전략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체제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과정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과 미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미·중의 협력적 양극체제 또는 미·일·중·러에 의한 다극체제로 변모하고 동아시아 안보질서도 장기적 시각에서 다자안보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전통적 우방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구조를 창출하는 한편, 새

I
II
III
IV
V

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지역협력구도로 포섭해 나간다는 장기적인 구상을 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과거에는 배타적 양자동맹구조 강화 및 중국봉쇄전략을 통해 억제했으나, 앞으로는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확장된 양자주의를 기반으로 다자안보협력체를 수립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제도화되면 미국은 중국의 과도한 민족주의를 순화시키고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력이 지역 안보딜레마로 발전하지 않도록 전략적 고려를 하는 한편, WMD 비확산, 에너지안보, 기후문제 등의 세계적 도전과제에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다자협력구도 속에서 동아시아 영향력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 한국과 일본의 갈등문제, 북한 핵문제 등이 약화·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창설을 통해 미국은 무역, 투자, 금융 등의 개방을 촉진시켜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경제 지역공동체의 결성을 추진하면, 중국의 부상이 지역질서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도록 중국을 견제·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중국과 공동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미국의 포괄적 개입정책은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 전망에서나 설정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협력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이익을 토대로 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은 수많은 국가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관계상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제이다. 향후 2013년경 중국이 이미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고 2025년경에는 미국 경제력 수준을 거의 60% 이상 앞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입각하면 동아시아 경제·안보

공동체 건설을 미국의 주도로 달성하려는 미국의 포괄적 개입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추월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동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창설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추진 가능한 대중정책은 개입정책과 제한적 규모의 대중국 군사봉쇄정책을 병행·추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대중정책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뿐 제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개입정책과 제한적 대중 군사봉쇄정책의 병행·추진으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군사적 분쟁,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증대 등을 저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급격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부상을 제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 갈등적 미·중관계

(1) 미국의 군사적 봉쇄

과거 부시 행정부의 중국정책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군사적 측면에서 대중 포위목적으로 추진되었다.⁸⁴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은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흔들 수 있는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으로 볼

⁸⁴ 나이(Nye)는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이 제어하기 어려운 경제부분은 제외하고 경제·정치적 권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군사력 중심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한다. Larry Everest, *Oil, Power and Empire* (Canada: Common Courage Press, 2004), p. 250.

I
II
III
IV
V

수 있다.

물론 패권이론적 관점에서 패권국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패권 쇠퇴기 현상으로 간주하고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패권 쇠퇴기의 정책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⁸⁵ 이러한 접근방식보다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패권국가는 미래의 세력판도의 향방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확고한 패권안정을 위하여 공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⁸⁶ 따라서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의 근저에는 탈냉전 후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 도전국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불안정한 패권상태를 도전이 불가능한 안정적인 패권체제로 전환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⁸⁷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일초다극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현상유지상태를 현상타파식 수정주의전략으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은 미국 국익의 일방적 추구를 자제하고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었지만, 향후 미국 행정부의 세계전략은 부시 행정부처럼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감내하고서라도 미국중심의 국제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현재의 현상유지상태를 변화시키는 수정주의적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여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중국과 군비경쟁을 벌임으로써 이를

⁸⁵ Taliaferro Jeffrey,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2000/2001).

⁸⁶ 장노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론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2호 (한국정치학회, 2003).

⁸⁷ 장달중·임수호, "부시 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10권 2호 (세종연구소, 2004).

통해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중국도 무력하게 만드는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다.⁸⁸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직접 군사력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봉쇄를 통해 정권기반을 침식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군사동맹은 중국봉쇄로 전면 재조정되고, 동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5개 지역으로의 중국봉쇄라인 구축을 추진한다. 미국은 중동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은 중국의 반패권 다극화 전략에 의해 와해될 수 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군사적 봉쇄정책의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봉쇄전략은 경제적 봉쇄가 수반되지 않으면 중국의 대국화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 미국은 과거 동서냉전시대에 소련 및 사회주의세력의 봉쇄를 위하여 군사적 봉쇄와 함께 경제적 봉쇄도 이행하였다. 미국은 서유럽에서 NATO 결성, 한·미와 미·일동맹 결성 등을 통하여 군사적 봉쇄를 하는 한편, 군비경쟁을 통하여 소련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미국은 소련·동유럽 및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에 대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금지조치(COCOM) 등의 경제봉쇄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군사적·

⁸⁸ 이장훈, 『네오콘 팩스 아메카나의 전사들』 (서울: 미래M&B, 2003), p. 237.

I
II
III
IV
V

경제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미국의 공산권 경제 봉쇄가 가능했던 것은 공산권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제국주의적 수탈구조로 간주하고 스스로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참여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봉쇄를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수행함으로써 중국 권위주의체제의 정통성 기반인 경제발전을 약화시키고 공산정권의 정통성 위기를 내폭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⁸⁹ 그러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는 다자주의 국제레짐인 WTO 체제 아래에서 성공을 기약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가 제국주의적 수탈구조가 아니라 생산력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지향적 동아시아 모델에 의거하여 산업화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최근 다자주의적 국제레짐인 WTO에도 가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강행하면, WTO 체제의 붕괴를 야기하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급기야는 미국 패권에 대한 정당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대중 경제봉쇄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의 손실을 우려하여 동참할 가능성이 적고 미국 내 중국 관련 기업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물론 미국이 WTO 체제를 위기상태로 몰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제봉쇄는 세계경제질서를 붕괴시키고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야기함으로써 미국 국내는 물론,

⁸⁹- Ross Munro, "China: The Challenges of a Rising Power,"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2000*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세계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정당성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패권적 지위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면적 경제봉쇄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부분적 경제봉쇄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예컨대 부시 행정부가 이미 실행에 옮긴 것처럼 유사 시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를 실행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약점이 에너지자원으로서의 석유 확보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석유소비국이다. 2000년 중국의 석유 대외의존도는 20% 전후였지만, 2010년 경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부족한 석유의 대부분은 중동지역에서 충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동지역이 주 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의 석유수요를 충당하고 중국권제를 위해서도 중동지역의 장악을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두 곳에 미군기지를 설치하였고, 러시아 영향권에 있었던 키르기스스탄에도 미군을 배치하였다.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지중해와 홍해로부터 대륙으로 이어지는 동부라인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외곽에서 포위하며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은 우선 반테러전쟁의 명분인 ‘민주지대의 확장’을 통하여 중국과 연대할 수 있는 이슬람세력 및 위협세력을 제거하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부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의 국가들은 중국의 에너지 확보지역 또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중첩된 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9·11테러 이후 미국이 점령한 아프

I
II
III
IV
V

가니스탄 역시 중국과 국경이 근접하여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장악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동국가들을 장악하여 중동석유를 동맹국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 중국은 원유수입의 7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지역을 장악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컨대 미·중 패권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석유공급을 차단시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설정 가능하다.⁹⁰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석유공급 봉쇄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도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높은 해외 석유존도, 특히 중동지역 석유수입 증가는 미국의 국제원유 봉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안보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미국이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지역 산유국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에서 아시아로의 석유 수송라인인 동남아 해상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유의 안정적 공급체계의 축이 중국의 경제안보 확보에 시활적 조건으로 등장함에 따라 중국은 인근지역의 유전 및 육상 수송라인 개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중국은 중동뿐 아니라,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의 산유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유개발권을 확보하며, 중앙아시아 및 동시베리아

⁹⁰ 중국은 2001년 현재 석유소비량의 45%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5년도 경우 중동에서 전체수입량의 66%를 들여와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의 석유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2004년 10월 7일.

석유수입 송유관 건설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원유 확보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유 해상수송로를 봉쇄하는 등의 미국의 대중국 석유봉쇄전략이 발동되면 해군력이 약한 중국은 원유 수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2016년까지 3척의 항공모함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석유 해상수송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석유봉쇄 역시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중 패권전쟁 발발 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해 군사거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이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중·러 반미연대 형성을 초래하여 미국의 대중국 석유봉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중국봉쇄정책에 대하여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편승정책을 취하는 한편, 국방정책은 군사현대화를 통하여 군사력 격차를 줄이는 균형정책을 취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미국의 MD 추진에 대하여 MD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핵전력을 증강시킬 것으로 추정된다.⁹¹ 또한 미국의 MD 개발이 러시아 핵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추진되면 반MD, 반패권을 매개로 한 중·러 대항동맹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⁹¹ 후진타오 주석은 2004년 8월 24일 “군비 증강은 전투 준비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국가안정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며, 특히 핵전력 증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군비 증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변국들은 후진타오가 급신장하는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부국강병(富國強兵) 정책’을 추진하며 중화 패권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9월 19일.

I
II
III
IV
V

중국의 패권적 지위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은 과거 소련봉쇄정책처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는 중국이 다자주의 WTO 체제에 속해 있는 한, 경제적 봉쇄를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성이 없고, 제한적 규모의 석유공급 봉쇄 전략 역시 평상시 사용이 극히 제한된 전략에 불과하다. 미국이 대중 군사적 봉쇄를 취할지라도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대립 우위적 성격이 강한 미·중 양극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군사적 봉쇄를 풀고 중국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평화적 방식으로 협력적 미·중 양극체제로 개편될 것이다. 반면 미국이 중국봉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국의 패권적 위상이 부상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방전쟁을 시도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패권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2) 패권전쟁

(가) 예방전쟁

세력전이 일어나는 초기단계에서 지배국가는 도전국가의 세력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전쟁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힘의 배분이 불리한 도전국가는 전쟁 승리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전쟁을 차후로 미룰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중국(경쟁국가)과 미국(지배국가)의 동아시아정책에서 그 실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만일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여전하고 미국이 이에 위협을 느끼면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방치하지 않고 사전에 제어하기 위하여 예방전

쟁(preventive war)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방전쟁은 중국의 급격한 국력신장으로 인한 세력전이가 나타나기 전 잠재적 도전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은 동반자외교, 다자주의 등 다극화 전략을 토대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약화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미국의 예봉을 피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권국 미국이 부상국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방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발생 시기는 2013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 의회 산하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는 2006년 보고서에서 구매력지수(PPP)로 평가 시 2013년경이면 중국 국내총생산이 미국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는 2013년 이후에는 미국의 전쟁 승리 가능성은 크게 줄어 들 것이므로 예방전쟁 시기는 대략 2013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국력이 약할수록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우월적 지위가 유지되는 2013년 이전에 미국은 대중 예방전쟁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예방전쟁은 최종적으로 중국 권위주의체제를 전복시켜 중국의 민주화를 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독립, 도농갈등 및 빈부갈등의 폭발 등 중국의 분열을 노려서 강대국으로의 등장을 사전에 제어하겠다는 목적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기축통화 문제, 국제금융기구 개혁문제 등의 세계금융패권을 놓고 미·중 갈등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의 예방전쟁발발로 이르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은 예방전쟁의 구실을 북한 핵문제, 대만문제, 해상수송로 확보문제 등으로 삼고 중국 견제

I
II
III
IV
V

를 위한 예방전쟁을 미·일동맹과,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중국과 일전을 벌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탈냉전 후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구현된 WTO 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에는 방관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국력이 일정단계에 오르면 미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에 도전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다양한 각도에서 잠재력이 무한한 중국을 견제하고자 예방전쟁을 시도할 수 있고,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는 중·미 간 패권경쟁을 촉발시킬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을 추구하게 하는 등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파괴하고, NPT 체제의 정당성 훼손으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관한 주도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세력권으로 간주하고 있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정권을 전복시키고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 있다. 또는 미국은 북한에 민중봉기, 군부쿠데타, 내전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WMD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제한적 군사개입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군사개입은 중국의 방어의지를 실험해보면서 중국에 대한 예방전쟁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을 자신의 안보적 완충지역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미국의 대북공격 의도를 타진하면서 자신의 안보적 국익을 방어하고자 미국의 개입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특히 9·11테러 후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으로 포위된 중국이 자신의 세력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마저 미국 영향권하에

배속된다면, 이것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헤게모니에 완전 포위·복속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은 미국의 북한공격에 강력 반발하여 미국의 대북공격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미·중 간 대결상황은 전장이 한반도에 국한되고 중국 대륙으로 확산되지 않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대리전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다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양국 간 대치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한반도문제가 미·중 간 패권적 갈등의 도화선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미·중 간 대치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면,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입장과 전략적 가치 때문에 본격적 미·중 패권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문제는 민족통일 문제인 동시에, 남중국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접수할 경우 아세안 국가들은 모두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화경제권으로 전면적으로 편입될 것이다. 미국 역시 대만을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준다면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력확대시기에 중국은 한반도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보고, 세력균형을 도모하는 시기에는 한반도를 해양세력을 저지하는 완충지대로 본다. 마찬가지로 세력균형시기 미국은 한반도를 대륙세력의 해양진출을 막고 동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일본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로 간주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중국 견제에 나설 경우는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에 확대되고 일본도 중국 영향력이 미치는 경우이다. 또한 세력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은 대북 군사공격을 통하여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소화시키



고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현상타파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개입을 불러와서 다시 휴전선을 놓고 중국과 상호 대치하는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문제를 기회로 중국과 전면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반도 전쟁을 대리전 형태로 수행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유지, 일본의 재무장 강화, 평화헌법 개정, 집단자위권 사용 등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 강화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은 한반도문제를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 강화수단으로 여기면서 중국에 대한 전면적 예방전 수행은 대만분쟁, 해상수송로 갈등을 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예방전쟁 수행에 앞서서 동맹강화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은 중국의 2차 보복능력 구축으로 인하여 자제되고 재래식 첨단무기가 동원된 재래식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예방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주변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는 물론,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동맹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적대국가들을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각종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중국견제를 위한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의 동맹도 강화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경쟁적으로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거나 외교관계를 동맹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 복속시킬 경우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약화 내지 러시아 포위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미국의 세력확장에 대항하는 반패권·반미 대항동맹을 중국과 결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과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 증진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중동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쟁탈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패권경쟁은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미·일동맹에 의한 예방전쟁이 발발하여 중국이 패할 경우 중국은 미·일동맹세력에게 동아시아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동아시아는 미·일동맹세력의 지도력에 의해 지역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예방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이 예방전쟁에서 중국에게 패할 경우 동아시아는 패권 국가 중국의 주도 아래 지역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될 수 있다. 예방전쟁의 결과로 그 성격상 동아시아 질서는 승패가 없는 경우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로 변화되거나, 승전국의 주도 아래 단극체제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나) 도발전쟁

중국의 국력이 확장 일로에 있고 지역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일동맹세력을 선제공격하는 도발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도발전쟁은 중국이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역내 질서, 특히 중국봉쇄에 치중되어 있는 안보질서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고 있는 국제경제체제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패권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불만족국가로서 중국에 의한 도발전쟁은 세력전이이론에서 말하는 패권전쟁의 경우이다. 불만족국가가 지배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자국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체제변화를 시도할 경우 체제위

I
II
III
IV
V

기가 발생하고 패권전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세력전이이론의 핵심 명제이기 때문이다.⁹² 또는 패권국가가 패권적 지위가 쇠퇴할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으킨 패권경쟁은 도발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세력전이이론에 의한 이러한 상황설정은 현재 국제질서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로부터 비롯되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가 체화된 국제경제질서를 개혁하고자 하지만 패권국 미국이 이를 거부하여 중국이 대미 도발전쟁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 오는 현실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중심 국제경제질서를 변혁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국을 중화권 경제로 통합해나가면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점진적 발전시키는 방식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⁹³ 이 경우 신뢰를 상실하는 미국의 달러와 쇠퇴하는 경제력으로 오히려 미국이 새로운 잠재적 패권국 중국에게 도발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 전쟁은 미국이 중국의 패권적 지위로의 부상을 미연에 제어하기 위하여 벌이는 예방전쟁의 경우보다 훨씬 비현실적이다. 세력전이가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 중국과 미국의 국력격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국의 국력은 오히려 중국에게 역전당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세력전이 중반 이후의 상황보다 중·미 간 세력분포가 미국에 유리하게 형성된 세력전이의 초반,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방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영

⁹² A.F.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⁹³ 중국이 미국에 대해 도발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하여 국제경제질서를 중국에 불리하게 개편하고 중국이 이러한 미국 조치에 반발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

역에서 개별 국가들의 판단은 합리적 선택보다는 ‘인식과 오인’(perception and misperception)에 의해서도 지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은 중국의 국력증진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도발전쟁을 불러들일 수 있다.

이러한 도발전쟁이 이루어지기 전, 중국은 눈부신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던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한국에까지도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한편, 일본까지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과거 소극적 다극화 전략에서 벗어나서 주변국들과의 대항동맹을 형성하는 적극적 패권주의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쇠락하는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기존 동맹관계가 약화되고 미국중심의 경제질서도 흔들릴 수 있는 패권위기에 봉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력전이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진척되고 나서 발생하는 미국의 도발전쟁은 미국의 패배로 이어지기가 쉽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축소되고 중국은 강력한 지역패자로 등장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과 한반도는 중국중심의 지역질서에 편승하는 전략을 채택하기 쉽다.

세력전이가 진행되는 중기 이후 단계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청산, 동아시아에서 고립주의를 선언하고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중국의 지역패권에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 신흥경제를 포기하고 고립주의를

I
II
III
IV
V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향후 세력전으로 중국이 장거리 군사투사능력을 위시한 종합국력이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등장할 경우 미국은 고립주의 노선을 선택하기 보다는 중국과 돈독한 동반자 관계 수립을 추진할 수 있다. 미·중 동반자 관계 확립은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의 청산을 의미하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과 미국의 주도 아래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협력적 미·중 양극체제로 형성될 것이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점차 증대되어 미국을 압도한다면 중국에는 미·중 간에 패권전쟁이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중국 주도의 지역질서로 개편될 것이다.

특히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세력전이가 진행되면서도 중국이 점차 민주화되고 시장경제체제를 체제이념으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주의적 정책을 취하여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중 간의 공동리더십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다자안보체제나 집단안보체제로 발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안정과 평화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중국의 국력신장 및 민주화, 미국의 대등한 국력유지 등의 요인이 어우러진다면 동아시아에서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경제성장, 민주주의, 인권 등을 향유하는 가장 바람직한 지역질서가 창출될 것이다.

IV. 미·중관계 변화와 북한 핵문제



1. 미국과 중국의 북한 핵정책 현황

가. 미국의 북한 핵정책

(1) 부시 행정부의 북한 핵정책

2001년 부시 행정부 집권 직후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나아가 ‘잠재적 적대국’으로까지 규정하고 중국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동아시아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미국 EP3 정찰기가 중국 하이난도 해군기지에 대한 정찰비행을 빈번하게 진행하던 도중 중국 공군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다해 대만의 방위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여 천수이볜 정부의 대만독립 노선을 부추김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였다. 미국의 대중정책변화로 인하여 미·중 간 군사대화도 중단되었다. 부시 집권 1기 내내 체니 부통령과 럽스펠드 국방장관 등 중국을 ‘잠재 적대국’으로 간주하였던 네오콘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였고, 파월 국무장관 등 중국과의 협력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였던 인사들의 발언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클린턴집권 시기에 비해 미·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2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했다.⁹⁴ 미국 본토가 역사상 최초로 적대세력에게 공격을 받은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반테러전 수행을 절박한 외교안보

⁹⁴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중후반기 정상의 교환방문을 실현하고 ‘건설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미·중관계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7년부터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 논의를 위한 4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클린턴집권 말기에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조명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미가 성사되어 북한 미사일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문제에 관한 협의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 목표로 설정하게 됨으로써 중국부상 견제를 추구하였던 부시집권 초기의 대중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부시 정부는 반테러전 수행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구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뿐 아니라 인도와 베트남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는 등 반중국 동맹전선을 강화하려는 전략의도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미국 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공화당 행정부는 민주당 집권시기의 대중 및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던 것이다.⁹⁵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미국은 클린턴 정부가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합의한 제네바합의를 불신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 직접 양자대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중유지원을 중단하고, IAEA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조치에 나섰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불량배국가’인 북한의 핵물질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중동지역 국가와 테러리스트에게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정책에 맞서 북한은 핵동결조치 해제를 선언하고, IAEA에 영변원자로 폐연료봉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를 요청하고, 2003년 1월에는 NPT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플루토늄 추출작업을 재개함으로써 핵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보였다. 북한의 이

⁹⁵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을 클린턴 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의미의 ‘ABC’(Anything But Clinton)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러한 위기고조조치는 부시 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정책 목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주장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발동하였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바라는 경제보상과 안전보장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로 2003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3자회담과 6차에 걸친 북핵 6자회담이 개최되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그리고 10.3합의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다. 중요한 문제는 6자회담 내에서 북·미 양자접촉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주장하였던 다자회담 방식에 의해 북한 핵문제가 다뤄졌다. 제네바 합의처럼 북한이 양자 간 합의를 쉽게 파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핵문제 합의에 대한 보상을 미국 혼자 부담하지 않겠다는 판단 아래, 미국은 다자회담 방식을 고수하였다. 미국이 6자회담 방식을 선호했던 이유는 국제연대를 통한 북한 압박구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 유도의 대가를 다른 참가국에게 분담시키려는 데에 있었다. 6자회담 방식은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협조 아래 북핵 해결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된다. 북한 핵문제가 동아시아 지역 강대국 부상 견제라는 부시 집권초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온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부시 집권기간 내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어 왔지만, 6자회담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6자회담은 역설적이게도 북한에게 핵무장의 시간을 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I
II
III
IV
V

감행했고,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유엔 안보리 1714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가 가능했다.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적 차원의 반확산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안보불안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근원적으로 해소해 줄 수 없다는 데에 있지만, 북한 핵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 간 불신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는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하여 충분한 역할행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이용하여 북·중 관계를 이간시키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월권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였다.

(2)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핵정책

‘변화’를 경선구호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시기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실추된 미국의 국제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대화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그는 북한의 김정일 같은 독재자와도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걸쳐 피력하였으며, 집권 이후에는 실제로 이러한 외교정책 방침을 구현하였다. 이슬람세계와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핵무기 감축을 제안하고, 이란과 쿠바와도 관계개선 의지를 밝혔다. 미주정상회의에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도 악수하였다. 오바마의 이러한 행보는 부시시기의 외교방식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것이다. 군사력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 의해 미국의 이익을 구현하는 형태

의 외교정책을 자제하고,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스마트외교’ 기치를 내걸고 있다. 적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방식보다는 경제지원 등 소프트파워를 동원하여 상대국의 호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단독으로 모든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⁹⁶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기 경제위기극복과 아프간과 이라크문제 해결을 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였고,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NPT 체제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계획에 합의 하는 등 핵 확산방지 노력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선의의 무시정책’(benign neglect)을 취해왔다. 대북정책의 우선목표를 핵문제 해결에 두고 북핵 불용 원칙하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주장을 고수하였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지 않은 데에는 김정일 정권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북한의 핵능력이 아직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작용했다.⁹⁷

⁹⁶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25권 2호 여름호 (한국국방연구원, 2009), pp. 31~59; Joseph S. Nye and Richard Armitag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⁹⁷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양자대화에 임하는 입장을 확정한 가운데 9월 20일 CNN TV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건재하고 통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Obama says North leader in good health,” <<http://joongangdaily.joins.com/article/view.asp?aid=2910377>> (검색일: 2009.9.22).

I
II
III
IV
V

조기에 후계작업을 마무리하고 대미관계 정상화와 경제회생을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북한은 긴장국면 조성이라는 무리수를 통해 국면을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했다.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기를 고조시켰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하에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고, 1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리 결의안 1714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여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고 미국 독자적으로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혐의가 있는 북한기업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동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로 응수하였다.

국제사회의 강경하고도 일치된 대북 압박조치가 강화되는 국면 속에서 북한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기점으로 대미 및 대남한 관계개선 행보를 보이는 등 전술적 유화공세를 취함으로써 오바마 정부 초기 미국의 대북 핵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⁹⁸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동아태 담당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NSC 아시아국 선임국장, 스티브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으로 이어지는 대북정책 실무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미국도 북한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집권초기와

⁹⁸ 북한은 2009년 7월 7일 미사일발사 이후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 한국, 중국 등에 유화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김정일-클린턴 면담, 미국 여기자 석방, 대미 관계개선 의지 표명, 현대아산 직원 석방, 적십자회담 재개,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이명박 대통령 면담 등 대미, 대남한 관계개선의 공세를 보이고 있다.

같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수단만을 취할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재정책과 함께 대화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있다.⁹⁹

출근 북한과 양자대화를 반대하던 오바마 행정부가 입장을 전환하여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게 작용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6자회담 대표)의 방미와 미·중전략 및 경제대화 등을 계기로 중국은 미국에게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계속 이행하되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미국과 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되었다.¹⁰⁰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금융위기 해결과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간 협력 분위기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⁹⁹ 이인호,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통일연구원 내부회의자료 (2009.9.15):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09년 10월 21일 미국 평화연구소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¹⁰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7월 2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여 북한 핵문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7월 27~28일 양일 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에서 중국은 6자회담 지속,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Joint Press Release on the First Round of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http://www.state.gov/r/pa/prs/ps/2009/july/126596.htm>> (검색일: 2009.8.17); 김홍규, “미·중 전략·경제대화 분석: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27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8.21), pp. 15~18.

I
II
III
IV
V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에 임하지만, 한·중·일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차 북핵 실험 이후 미국이 베를린 북·미대화를 통해 북한과 중요한 사항을 합의하고 6자회담장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북핵 대화가 전개됨으로써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북핵 대화를 진행하지 않으려 한다. 오바마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제재조치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과 대화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유지함으로써 북한과 대화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과의 공조체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데 중국이 양해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진행하고 양자대화 이후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⁰¹

북한이 핵능력을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대화에는 나서지만, 미국 정부는 과거와 같은 대화전략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 과정 중 일부를 합의해 주고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으로부터 부분적 보상을 받아내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미국은 ‘포괄적 패키지’ 형태로 북한 핵문제를

¹⁰¹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관리들은 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항상 중국을 빠뜨리지 않고 방문하여 중국측 6자회담 대표와 외교안보 책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결하고자 한다. 즉 북한 핵문제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한반도 안보문제 나아가 동북아 안보문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으로 보인다.¹⁰²

나. 중국의 북한 핵정책

(1) 2차 북핵실험 이전 북한 핵정책

2002년 말 북한 핵위기가 발생한 후,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를 북핵 3원칙으로 주장해 왔다. 이후 2006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후에는 북핵위기 관리에 더 관심을 보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¹⁰³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고, 일본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에게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작용함으로써 동북아와 한반도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나아가 중·북 간 정치적 신뢰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2007년 3월 김계관 부상이 미국 방문 시 밝힌 것처럼 북한이 미국의 대중경제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¹⁰⁴ 또한 중국은 북한

¹⁰² “클린턴 북·미대화 맨 비핵화 대가 제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161817325&code=910303> (검색일: 2009.9.17).

¹⁰³ 이 부분은 신상진,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대응,” 『국제평화』, 제4권 1호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2007.6), pp. 115~123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음.

¹⁰⁴ 중국사회과학원의 샤오핑 연구원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중·북관계가 어떻

I
II
III
IV
V

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정책이 미국에게 동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의 명분을 강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자극하고, 역내 동맹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근본적 목적이 중국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을 중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¹⁰⁵ 이처럼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위기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해 왔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구도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도 북한 핵문제를 무력이나 압력수단만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도 바람직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입장을 견지하였다. 1993~94년 1차 북한 핵위기 시에는 중국의 직접 개입 없이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2003년 이후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한반도 및 동북

게 변화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邵峰, “朝核問題走向及中國的應對,” <<http://www.iwep.org.cn/info/content.asp?infol=2666>> (검색일: 2007. 5.25); 중공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나라는 중국이라고 강조하였다. 張璉瑰, “擔心伊朗模式加身朝鮮的真實意圖,” 『中國評論』, 2006年 9月號, p. 75.

¹⁰⁵ 時殷弘, “美國國家導彈防禦計劃與中國的對策,” 『中國外交』, 2002年 第7期, pp. 47~51.

아 안보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했다.¹⁰⁶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북한 핵문제를 대미관계 개선에 활용하려는 데에 있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대중견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부시 행정부와의 신뢰를 구축할 목적으로, 중국은 북한에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주문하고 북·미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특히 2차 북한 핵위기 당시 대만의 민진당 정부가 독립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독립지향 행보를 보여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중국은 대만독립 저지를 위해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 미국에 협력하였다.¹⁰⁷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대미관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북한을 계속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던 것이다.¹⁰⁸

또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위협과 정권교체정책에 있다고 보고, 북한의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¹⁰⁹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106.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증대,” 『국가전략』, 제11권 2호 여름호 (세종연구소, 2005), pp. 36~37.

107. 이에 대해서는 신상진,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국가전략』, 제13권 3호 가을호 (세종연구소, 2007), pp. 55~87 참조; Shen Dingli, “North Korea’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Autumn 2006), pp. 19~34 참조.

108.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만을 고집하여 북핵위기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자 중국은 2003년 초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대북 송유관을 3일 간 폐쇄하는 압력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경제적 지원카드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109. 孫承, “第二次朝鮮核危機,” 『國際問題研究』, 2003年 第3期, p. 19.

I
II
III
IV
V

고 보고 미국에게 대북 안보위협 해소를 주문하였다. 당시는 미국이 반테러전과 반핵산을 명분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해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가 안하무인 격으로 세계 도처에서 군사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 정권도 생존의 위협을 느껴 핵무기개발을 재개했다는 인식이 중국 전략가들의 인식을 지배했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에는 중국의 북핵정책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합리적’ 안보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핵 3원칙으로 제기하지 않고,¹¹⁰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미 간 대치국면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북아에서 핵무기경쟁이 전개되는 것을 막는 등 위기관리에 역점을 두었다.¹¹¹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하고 부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였지만, 중국은 징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게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고 고사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중국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대북제재

¹¹⁰ 북핵 실험 직후 중국 외교부는 북핵 3원칙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 그리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협상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劉建超：六方會談仍是解決朝核問題的有效途徑，” <<http://world.people.com.cn/GB/8212/9491/57325/4901978.html>> (검색일: 2006.10.10).

¹¹¹ 沈世順, “對朝鮮核試驗的看法,” <<http://world.people.com.cn/GB/1030/4931822.html>> (검색일: 2006.10.18); 李敦球, “朝核試驗後的六方會談機制,” 『現代國際關係』, 2007年 第1期, p. 16; 林利民, “朝核危機管理與中國的外交決策,” 『現代國際關係』, 2006年 第8期, pp. 32~38.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치엔치천 국무위원을 미국과 북한 등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중국은 김정일에게 2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였으며, 미국에게는 무력과 제재수단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¹¹² 결국 중국의 중재외교로 미국과 북한 6자회담 대표가 베이징과 베를린에서 접촉을 가진 뒤 6자회담이 재개되어 9.19공동성명 이행에 관한 2.13합의와 10.3합의가 도출되었다.

(2) 2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핵정책

2009년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무기실험을 강행하여 북한 핵위기가 고조된 후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보여 주었다. 1차 핵실험 당시 사용했던 “제멋대로”(恣然)라는 적대적 의미가 담긴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례를 깨고 성명문을 발표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결의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당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핵실험을 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시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확산 방지, 동북아의 평화

¹¹²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개최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류지엔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며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劉建超：六方會談仍是解決朝核問題的有效途徑。”

와 안정유지는 중국 정부가 흔들림이 없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는 유관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중국 정부는 관련국들이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¹¹³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한 안보위협에 기인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입장도 함께 보였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2006년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북한을 비난하는 입장을 더 강조하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과정에서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대입장이 잘 드러났다.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모든 무기와 관련 부품 수출, 제조, 유지, 사용과 관련한 금융거래 차단조치를 취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운반협약이 있는 북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검색, 압수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미얀마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 강남호 입항을 거부하고 단동세관에서 북한으로 향하려던 바나듐을 압수한 사례는 중국이 행동으로 대북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마지막 보호막이 되어왔던 중국마저도 북한의 핵무

¹¹³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發表聲明,”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564332.htm>> (검색일: 2009.5.25).

장을 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에 힘을 보태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핵사태를 이용하여 군사적 긴장국면을 고조시키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를 중대한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북한체제 붕괴는 중국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북한주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면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사회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고, 전략적 방어망으로서의 북한 붕괴가 가져 올 안보위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국은 제재를 통한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위기관리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장예쑤이 유엔 주재 중국대표와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적절하고 균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는 유엔 헌장 41조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붕괴시킬 정도의 과도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대변하였다. 또한 북한의 주권과 합리적 안보우려가 존중되어야 하며,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북한이 결의안의 규정들을 준수할 경우 대북제재조치가 중단·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사용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은 제재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며, 외교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I
II
III
IV
V

최종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¹⁴

북한이 2차 핵무기 실험을 강행한 후 중국이 보여준 입장과 행동을 통해서 볼 때,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은 북한 핵 위기관리와 북한의 안정유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 있다.¹¹⁵ 중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북한의 핵무기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미관계 개선 및 강대국 부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실험에 분명한 반대외사를 밝히고 있다.¹¹⁶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체제안정을 저해할 정도로까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반대하고 6자대화가 재개되도록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¹¹⁷

114- “张业遂：安理会决议向朝鲜发出了积极正面的信息，” <<http://www.chinanews.com.cn/gj/gj-gjzj/news/2009/06-13/1732535.shtml>> (검색일: 2009.6.13); “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t569526.htm>> (검색일: 2009.6.25).

115- 朱鋒，“中國戰略目標的昇級——強國富民，與美共贏，” <http://www.dwnews.com/gb/MainNews/Forums/BackStage/2009_4_29_10_31_17_645.html> (검색일: 2009.5.2).

116-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자국의 안보이익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주도권을 강화시켜 중국의 안보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미국은 한반도 주변해역에 이지스급 구축함과 F-22 최첨단 전투기를 배치하였으며, 케이시 미 육군총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상전에 전투력을 참전시킬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다음날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공표하였으며, 한·미·일 간 군사안보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안보 불안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안보적 포위의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117- 중국 내 일부 인사들은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안은 실제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북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상황이므로 국제사회의 대북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7월 이후 북한이 위기고조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에 대해 화해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북핵 대화재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에 6자대화를 재가동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8월 클린턴 전 미 대통령 방북 이후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였고, 미국 국무부가 북·미 양자대화를 위해 보즈위스 특별대표의 방북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는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후진타오의 친서를 소지하고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로부터 비핵화 입장과 다자대화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¹¹⁸ 중국은 악화된 북한 핵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북·미 양자대화를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는 구도가 현실적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¹¹⁹ 김정일이 양자대화와 다자대화 참여입장을 밝힘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와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행보를 적극화 할 전망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난 것도 북한에게 6자회담 참가를 설득하려는 데 목적이

제재조치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고 있다. 鄭永年, “中國在朝核問題上應吸取的教訓,”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7/forum_zp090707.shtml> (검색일: 2009.7.8); 林繼明, “制裁朝鮮, 中國成最後的輸家,” <<http://www.wyzxsx.com/Article/Class20/200906/89730.html>> (검색일: 2009.6.28).

118. “朝鮮領導人金正日會見胡錦濤主席特使戴秉國,” <<http://world.people.com.cn/GB/10080017.html>> (검색일: 2009.9.18).

119.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힘으로써 5자회담 구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천명하였다. “2009年6月23日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jzhsl/t569091.htm>> (검색일: 2009.6.26); 黃彬華, “李明博的五方會晤方案夭折,”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7/forum_zp090703a.shtml> (검색일: 2009.7.8).

I
II
III
IV
V

있었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와 10월 10일 한·중·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시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 의하면, 김정일이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2009년 10월 5일 김정일은 원자바오와의 회담에서 북·미 간 양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북한이 6자회담 영구탈퇴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6자회담 참가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앞으로 북·미 양자대화가 열릴지 그리고 북·미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인지에 따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결정될 것이지만, 어쨌든 김정일이 직접 6자회담 단어를 꺼냈다는 사실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¹²⁰

중국은 과거 북한 핵문제를 대만문제와 연계해서 다룬 측면이 있었으나, 2009년 3차 북핵위기 시에는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성을 덜 느껴왔다. 2008년 양안 간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민당의 마잉주가 집권한 후 중국과 대만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중국이 대만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 핵문제를 폐기보다는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미국과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¹²¹ 그러나 북한이 대화재개의사를 밝히

¹²⁰ 신상진,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과 북·중관계,” 『북한』, 2009년 11월호.

¹²¹ Zhang Liangui, “DPRK’s moves driven by inner urge to power,”

고 제1차 전략 및 경제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핵위기의 장기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미관계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자세를 변화하고 있다.¹²²

2. 향후 미·중관계 변화가 북한 핵문제에 미칠 영향

미국이 기존 패권국이며 중국은 새로이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미·중관계의 모습은 중국의 발전속도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양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으로 국제적 위상이 약화된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반면,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²³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반해 미국의 지위가 상대

<http://www2.chinadaily.com.cn/opinion/2009-06/01/content_7957910.htm> (검색일: 2009.6.2); Willy Lam, "Beijing Mulling Tougher Tactics Against Pyongyang," *China Brief*, Vol. IX, Issue 12 (June 12, 2009), p. 2; 朱鋒, "中國戰略目標的昇級-- 強國富民, 與美共贏," <http://www.dnews.com/gb/MainNews/Forums/BackStage/2009_4_29_10_31_17_645.html> (검색일: 2009.5.2).

¹²² 時殷弘, "中國如何面對朝鮮: 堅忍發揮作用," <<http://news.sina.com.cn/o/2009-06-29/150415868502s.shtml>> (검색일: 2009.6.29).

¹²³ 이에 대한 논의들은 Roger C. Altman, "Globalization in Retreat: Further Geo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Financial Crisis," *Foreign Affairs*, Vol. 88, No. 4 (July/August 2009), pp. 2~7; Mathew J. Burrows and Jennifer Harris, "Revisiting the Future: Geopolitical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2 (April 2009), pp. 27~38.

I
II
III
IV
V

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제할 경우, 이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앞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3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는 향후 미·중관계가 상술한 3가지 시나리오에 의해 전개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북한 핵문제 전개방향을 분석·전망해 보고자한다.

가. 협력·대립적 미·중관계하의 북한 핵문제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미·중관계가 21세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2009년 2월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적대국이 아니며 중국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시아와 세계질서에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미·중관계를 ‘같은 배를 타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同舟共濟) 관계로 규정하고 금융위기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국제안보문제 등 다양한 국제사무 대처과정에서 중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¹²⁴ 오바마 대통령도 당선 후 후진타오 주석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현 세계질서에서 미·중관계가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의 협력이 두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09년 7월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개막식 연설에서는 “미·중관계가 21세기 세계질서를 결정하는 가장

¹²⁴-Hillary R. Clinton, “Security and Opportunit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3005/hillary-rodham-clinton/security-and-opportunity-for-the-twenty-first-century>> (검색일: 2009.2.8); Hillary R. Clinton, “U.S.-Asia Relations: Indispensable to Our Future,”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33.htm>> (검색일: 2009.2.13).

중요한 양자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국제문제 대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¹²⁵ 오바마 정권의 등장을 전후하여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G2’ 개념과 ‘중미국’(Chimerica)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세계 및 동아시아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통해 미국이 세계와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을 관리해 나가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상호 의존의 세계질서 속에서 자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부 갈등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협력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¹²⁶

이처럼 미국의 외교안보문제를 다루는 최고지도부가 세계경제 및 안보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바, 북한 핵문제 대처과정에서도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¹²⁷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양자대화에 응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6자회담을 중요하게 견지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자회담은 중국이 주재해 왔으며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논의방식은 분명히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다.

¹²⁵-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at-the-US/China-Strategic-and-Economic-Dialogue> (검색일: 2009.9.22).

¹²⁶- Thomas J. Christensen, “Shaping the Choices of a Rising China: Recent Lesson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3 (July 2009), pp. 89~104.

¹²⁷- 전병곤, “美·中 G2 시대의 개막, 한반도의 앞날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07104720&Section=05> (검색일: 2009.9.22).

중국은 미국이 양자대화를 개최하여 북한과 핵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북·중관계가 비정상적이고 미국이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양자대화 진전에 대해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국도 북·미 양자대화를 거쳐 6자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다이빙귀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후진타오 주석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하여 김정일로부터 직접 비핵화 실현과 다자회담 참가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다. 다이빙귀 국무위원의 북한방문을 통해 김정일로부터 양자대화와 다자회담 참가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중국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부여해 주었다. 미국은 그동안 반대해 왔던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개최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북·미 양자대화를 거쳐 6자대회를 재개하여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중·미 간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부시 집권 2기와 마찬가지로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와 등 동아시아 역내 동맹국과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인도와 베트남 등 중국의 잠재적 경쟁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 국무부 장관인 클린턴은 취임 후 동아시아를 첫 번째 순방지로 정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동남아우호협력조약』에 가입하는 등 부시 정부 시기에 소홀히 하였던 동남아국가와의 관계복원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외교 공세 역시 중국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 대외정책의 중점이 중국을 겨냥하여 서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¹²⁸

이처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내 동맹국과 군사협

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은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역내 관련국과 공조체제를 중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중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군사력 면에서 미국이 세계패권국 지위를 향유하고는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군사력을 제약없이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와 플루토늄을 어디에 은신해 두고 있는지 탐지하기가 쉽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시설에 관한 정보는 더욱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 타격이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타격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역내 미군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성이 있고, 「북·중 군사동맹조약」의 유효성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도와야 할 조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¹²⁹ 따라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과의 협조하에 대화를 통해 다루나가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압력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8년의 경우 북한

128. 鄭永年, “中國의崛起及其外交和戰略壓力,”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7/forum_zp090916.shtml> (검색일: 2009.9.16).

129. 중국은 군사력 파병의무를 규정한 북한과의 군사동맹조약 2조의 실효성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에게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과 한국에게는 북한영내로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 자료에 의하면, 북·중 동맹조약을 2021년까지 유효하도록 2001년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
II
III
IV
V

의 대외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달하며, 중국은 북한에게 매년 3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제공하고 있고,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사상태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4월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 주장을 철회하고 3자회담을 수용한 결정적인 이유도 탕자쉬엔 국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설득하고 송유관 차단조치를 통해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북한에 대해 중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미국 조야의 전략가들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중국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¹³⁰

셋째,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최근 호전되고는 있으나 그가 만 67세의 고령이며 건강에 뚜렷한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북한 핵문제를 김정일 유고와 같은 북한 급변사태와 연계해서 다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병풍으로 여전히 간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1,300Km가 넘는 긴 국경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 유사 시 북한 군부세력이 핵탄두를 중국국경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필요 시 미국 특공대를

¹³⁰- "US looks to China for NKorea progress," <<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hYphBjQpSQaF-1iOitH4PhHufOGwD9AS3P700>> (검색일: 2009.9.22).

북한에 투입하여 북한 핵탄두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묵인 또는 양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¹³¹

그러나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대한 미·중 간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중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협력과 타협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국의 핵무기정책에 차이가 있고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의 최종적인 해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셈법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문제 논의를 위해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참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을 통해 공개하였지만, 미국이 북한 핵문제의 중요사항을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6자회담 기제는 단순히 북·미합의를 추진하는 형태로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현재까지는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나,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자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여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폐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안보의 전가보도로 간주하여 완전한 폐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기관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¹³² 중국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역내 안정과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지만 북한정권의

¹³¹- Michael E. O'Hanlon,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_north_korea_ohanlon.aspx> (검색일: 2009. 8.25).

¹³²- 사실 미국도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시 집권 말기 미국 정부 유관기관과 안보담당 관리들 중 일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고,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는 있지만 북한 핵의 폐기보다는 핵확산을 방지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붕괴가 가져 올 한반도 불안정과 이것이 자국에 미칠 안보위협 때문에 북핵폐기보다는 북핵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세력판도가 중국에게 점차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맞아, 북한 핵문제의 최종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해를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 중국과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대만문제를 연계해 왔는데, 양국이 두 개 문제 모두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은 말라카해협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해상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이 동아시아의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중국 역시 국가통합을 3대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통일문제에 대해 미국이 합의해 준다면, 북한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온 지역이기 때문에, 대만을 손에 넣기 위해 북한을 버리는 양자택일의 극단적인 옵션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만은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한은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전략적인 요충지다. 어떤 점에서는 대만문제는 중국에게 명분의 문제지만, 북한문제는 중국에게 국가안보를 결정짓는 실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2년까지 대만독립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당이 계속 집권하기 때문에 대만독립 저지를 위해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요

청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국은 당분간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미국에게 대폭적인 양보를 할 필요성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향후 미국과 중국은 부시집권 2기와 유사하게 대만해협위기와 북핵위기와 같은 동아시아 안보위기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입장차이가 존재하며 북한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논의는 긴밀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협력의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의 세계경찰국가 역할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미·중이 제한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협력하게 되면 북한과 같은 불량배국가의 핵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¹³³

나. 협력적 미·중관계하의 북한 핵문제

단기적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및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가 유지되고 중국은 경제발전과 산적한 대내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기존 세계체제를 수용하고 미국에 대해 협력을 지향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권은 지속될 것이며, 동아시아 안보 및 경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큰 동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중국이 민주화되어 내부진통을 겪고 대만문제, 티벳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 분

¹³³. Roger C. Altman, "Globalization in Retreat: Further Geo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Financial Crisis," pp. 6~7.

리주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여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국력증강 속도가 정체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안정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중국이 미국에 순응하는 국가로 남아 미·중관계가 협력을 지향할 수 있다.

중국경제가 여전히 미국에 크게 의존되어 있을 것이므로 성장세가 정체되어 갈수록 중국은 미국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에 협력할 필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중국의 지도부는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배려하기 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북한의 핵무기폐기를 위한 미·중 간 협조체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에 의한 패권체제가 공고화하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등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심리적 안보위협은 더 증가할 것이므로, 북한이 핵탄두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통큰' 양보를 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중국이 미국의 편을 들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미·중·북 3자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 미국이 중심 역할을 해 온 6자대화 참여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뤄나가는 경향을 보일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안보위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인식하여 비핵화에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하에서 예측 가능한 또 다른 문제점은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어 실업률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동시에 대만문제와 티벳 및 신장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개입이 지속될 경우 중국에서 대미 강경 여론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인들의 여론이 반미성향으로 변화될 경우에는 미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미·중관계가 협력적으로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미국이 급속하게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내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면서 역내에서 점차 미군을 철수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¹³⁴ 동아시아 역내 외교안보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맹국에게 책임을 더 많이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증대를 촉구 또는 묵인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미국과 중국경제가 현재와 같이 상호의존의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에너지안보 뿐만 아니라 대만과 동아시아 역내 미군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중이 상호 긴밀한 전략대화를 통해 윈-윈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미·중 간 세력변화가 평화적으로 이행되는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중장기적 시나리오로 볼 수 있으나,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심지어는 동맹국가 간에도 종종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향후 미·중관계에서 이러한 경우가

¹³⁴-Richard Baum,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An American Perspective," A Paper Present at the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Sino-US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Seoul, September 11, 2009, pp. 61~62.

I
II
III
IV
V

실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낮을 것이다.

중국의 국력과 지위가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부상하고 미·중관계가 평화적이고 협력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 민간레벨에서 중국을 미국과 함께 'G2'로 인정하고 중국과 미국을 이익공동체로 간주하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중국에게 국제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분담을 요구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직 미국과 함께 국제문제를 공동으로 통치해 나가는 데 부담을 느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¹³⁵ 국력이 더욱 신장되고 미국이 중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간주하게 된다면 중국이 국제안보문제에 대한 개입과 역할을 적극화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은 과거보다 강력한 대북한 압박조치를 행사하여 북한 핵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동맹조약」 파기와 원유 등 전략물자 차단과 같은 강도 높은 제재수단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¹³⁶

¹³⁵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5월 20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11차 중국-EU 정상회의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G2'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G2'와 'Chimerica' 등의 개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핵심 이유는 첫째, 미국이 중국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둘째, 중국이 'G2' 개념을 수용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불필요한 우려와 경계심, 즉 '중국위협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李兵 外, “溫家寶反駁中美共治說,” 『環球時報』, 2009.5.22; Jian Junbo, “China says 'no thanks' to G-2,” <<http://www.atimes.com/atimes/China/KE29Ad01.html>> (검색일: 2009.6.1); 錢文榮, “G2試圖將中國變成美國的附庸,” 『半月談』, 2009.4.28.

¹³⁶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3단계의 제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는 북·중 국경지역에서 불법거래를 단속하는 것이고, 2단계 조치로는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3단계로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전략을 모색하게 될 때,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 핵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남아 있게 될 경우, 한국, 일본, 대만 등 역내 국가들은 핵보유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미국이 명확하게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약화될 경우, 동아시아에 핵확산 도미노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발휘했던 경찰국가 역할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떠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건설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2050년까지 현대화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행사할 것이다.

미·중 간 세력판도가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역할을 감축하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느끼게 될 안보위협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으로 대변되는 한반도 안보구도가 해체되고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논의가 활성화되거나 이와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다.¹³⁷ 이러한 안보환경은 북한에게도 핵무기를 통한 생존정책을 추구할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킬

에너지 공급 중단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¹³⁷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냉전적 동북아 안보구조의 틀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I
II
III
IV
V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핵포기 유도정책이 비교적 손쉽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강한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통해 북한체제와 이념적으로 괴리될 경우보다 사회주의체제의 틀을 유지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다. 갈등적 미·중관계하의 북한 핵문제

중국을 미국의 외교안보이익에 대한 최대 도전국으로 인식하여, 미국이 기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저지·봉쇄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신흥강대국이 국력을 증강하게 되면 기존 패권국 지위에 도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는 시카고대학교의 미어샤이며 등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이 미국의 대중정책을 전개할 때, 미국은 중국을 현상타파세력으로 보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봉쇄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봉쇄망을 강화하면서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요구하여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원유수송로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중국경제의 성장을 저지하는 최악의 행동을 보일 때,¹³⁸ 미·중관계는 파국으로까지 치닫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동반자로 간주하고 일방적인 대중 봉쇄정책을 채택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며 중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질서를 수용하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대

¹³⁸ 이코노미는 미국은 중국을 단독으로 상대하지 말고 일본, EU 그리고 주요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적 현실주의(multilateral realism) 전략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Elizabeth C. Economy, "The G-2 Mirage," *Foreign Affairs*, Vol. 88, Issue. 3 (May/June 2009), pp. 14~23.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¹³⁹ 이러한 형태의 미·중관계는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시점인 2010년대 중반 이후에나 상정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게 될 주요 쟁점들로 경제마찰과 인권문제도 있지만, 대만문제, 티벳과 신장 분리주의문제, 에너지 확보문제 그리고 북한문제가 핵심적 갈등사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¹⁴⁰ 현재는 미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국력증강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위협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면 상기 4가지 문제를 통해 중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시장(티벳)과 신장문제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문제와 에너지확보를 둘러싼 대립 그리고 북한문제로 미·중이 대립할 경우에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중관계가 세력전이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패권적 대립관계를 지향할 때, 북한 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협력을 기대하기가 곤란해 질 것이다. 미·중은 한반도 특히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시키기 위해 경쟁을 강화할 것이며,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으로 한반도의 군사구조가 냉전적 대립상태로 악화될 것이

¹³⁹ 오바마는 유엔 총회연설에서 미국 혼자 세계의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책임분담을 강조하였다.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to-the-United-Nations-General-Assembly> (검색일: 2009.9.24); “中美：小摩擦不斷，大方向不變，” <http://www.dwnews.com/gb/MainNews/Forums/BackStage/2009_9_21_16_47_17_604.html> (검색일: 2009.9.21).

¹⁴⁰ Richard Baum,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An American Perspective,” pp. 57~58.

I
II
III
IV
V

다. 북·중동맹이 강화 또는 복원되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안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용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¹⁴¹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폐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가 사실상 곤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법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구실로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군사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패권유지를 주장하는 강경론자들이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주관하게 되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몽골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일본 및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한·일과의 군사협력관계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해 제한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하도록 하고 북한을 돕도록 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소련붕괴의 전철을 밟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최악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수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과 베이징의 안보에도 위협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은 국가 안전보호라는 명분하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규탄하고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북·중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배치하여 미국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역내 핵확산을 우려하여 원

¹⁴¹ 상하이에서 선당리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소장과의 인터뷰, 2009.8.14.

론적으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아프간문제와 같이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안보문제에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것이다.¹⁴²

미·중이 세력전이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지역은 대만해협이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 이후 대만통합을 3대 국가정책 목표로 간주해 왔는데, 2012년 대만에서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정당 지도자가 총통으로 당선되어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고 미국이 장기적으로 대만문제 해결을 지지할 경우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여 통일을 추구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단행하는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에 의한 도발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괌 등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분산시키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북한 핵폐기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¹⁴³

142. 金燦榮, “中美關係與環境外交,” 『中國外交』, 2009年 第7期 (2009.7), pp. 44~45.

143. 상하이에서 선딩리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소장과와의 인터뷰, 2009.8.14; Shen Dingli, “North Korea’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Autumn 2006, pp. 24~25; Shen Dingli, “The Sino-US Relations and Alliance Structures in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 at the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Sino-US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Seoul, September 11, 2009, p. 148.

V. 결론



향후 금융위기 이후 형성될 미·중관계는 한반도 안보를 결정하는 상위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 현재의 대립·협력적 미·중관계는 협력적 관계 또는 신냉전 및 물리력을 수반하는 갈등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 북한 급변사태, 대만문제 등을 계기로 미국이 예방전쟁을 야기하면서 한반도는 심각한 안보위협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 북한 급변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예방전쟁을 벌일 경우 한국이 북한과 협력관계를 이루고 못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다면 한반도에는 남북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북 간 전쟁으로 한국은 수많은 인명살상은 물론, 그 동안 이룩해 놓았던 산업화 시설이 파괴될 수 있는 위협에 처할 수 있으며, 북한 역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될 수 있고 많은 난민발생이 우려된다. 만일 미국은 예방전쟁 도중에 중국과 강화조약을 맺고 대중 봉쇄정책에 나서면 동아시아에서는 대립적 미·중 양극체제가 구성된다. 이 경우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 국가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 국력의 절대적 우위가 확립되면 미국은 대중 봉쇄정책을 풀고 포괄적 개입정책을 취하여 동아시아는 협력적 양극체제에 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 통일 형태 및 과정은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지만, 국력의 우위를 확보한 중국의 영향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북한 핵문제, 북한 급변사태 등을 계기로 예방전쟁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이 우위를 차지하지만, 중국과의 지구전에 승리하지 못하고 월남전처럼 본토로 패퇴하여 동아시아 고립주의정책을 취한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중심 단극체제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미동맹이 중국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한·미동맹의 패배로 종결된다면 전쟁에 참여한 한국의 국가

I
II
III
IV
V

안보는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중국중심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패전국의 명예를 쓰고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의 체제변화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체제로 이행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봉쇄개입정책 ⇨ 대립·협력적 미·중 양극체제 ⇨ 미국의 예방전쟁 ⇨ 대립적 미·중 양극체제 ⇨ 미·중의 도발전쟁 ⇨ 중국중심 단극체제 등의 수순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형태는 어떠한 형태의 변화유형과 비교할 수도 없이 한국 및 한반도에 주는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방전쟁, 도발전쟁 등 두 차례의 미·중 패권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위협과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는 심각한 변화의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고 한반도 통일 역시 주도권을 북한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경제 환경과 통일구도를 한국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속 중인 미국의 봉쇄·개입정책(congagement policy)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고,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까지는 미국의 봉쇄·개입정책이 개입정책 위주로 바뀐 다음, 중국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 이후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전면적 개입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동아시아 국제질서 유형은 대립·협력적 미·중 양극체제로부터 협력중심 미·중 양극체제, 협력적 양극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 북한 급변사태가 평화적으로 해소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협력적인 동아시아 국제환경 아래에서 미·중 패권의 갈등수위를 낮추고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 실현, 미·일

의 대북관계 정상화 및 북한의 개혁·개방 환경조성, 동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등의 일련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분단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등 한반도 상생·번영과 평화통일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전통적 주권국가 개념에 머물러 있는 절대안보 추구로부터 신뢰구축, 군비통제, 군비감축 등은 물론, 우발적 분쟁을 방지하는 예방 등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협력안보수준으로 발전되어야 달성이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촉진·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안보환경은 동아시아에 미·중 양극체제가 형성되고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안보제도가 구성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중국이 점차 민주화의 길을 밟으면서 미국과의 이념적 갈등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실현 가능한 구도이다. 그러나 미국은 쌍무동맹 위주로 여전히 동아시아 안보에 접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중국은 통제당하는 국가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다자안보대화에도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구조 이외에도, 중국·대만, 남·북한, 일본·중국, 한국·일본 사이에도 불신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영토분쟁 등도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면 안정된 한반도 안보환경을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추동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무엇인가? 이는 이미 앞에서 논의했듯이 미·중 간 전략적 균형에 의한 세력균형이 확립된 균형적 양극체제이다. 이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상대의 핵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보복공격을 통해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상호 확실

I
II
III
IV
V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및 '공포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고 재래식 군비에서도 상당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극체제이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미국중심의 일초다극체제가 중국의 국력증강에 따라 미·중 양극체제로 개편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향후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핵전력과 재래식 군사력 수준도 미국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2020년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동아시아 질서는 균형적 양극체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균형적 양극체제하에서 안보대화·협력의 통로로서 다자안보협력체가 구성되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현상유지 형태로 전환되고 남북 간에도 화해와 협력기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당분간 지배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미국은 비대칭적 국력관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상타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차적으로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억지강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및 미사일 방어계획 추진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중동석유를 장악하여 중국의 석유공급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유라시아에서의 세력균형 추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 추진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지속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개입정책(engagement)을 추구하되, 정치·군사적으로는 봉쇄정책(containment)을 추구하는 개입·봉쇄정책(congagement)을 지속할 것이지만, 석유자원 확보 등에서는 경제적 봉쇄정책을 암묵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 민주화 등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

만일 미국의 개입·봉쇄정책(congagement)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균형화 전략이 심화·확대될 경우 미국은 대외정책노선의 정당성을 민주화 확대론 및 중국 위협론에서 찾고 북한문제 및 대만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대중정책 수순을 대중예방전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세력전이 일어나는 초기단계에서는 지배국가가 도전국가의 세력 확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도전국가는 전쟁 승리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전쟁을 차후로 미룰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중국(도전국가)과 미국(지배국가)의 동아시아 정책에서도 그 실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¹⁴⁴ 특히 예방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중국 봉쇄에 나서거나 중국의 민주화를 촉발시켜 소수민족문제, 도농갈등, 계층갈등 문제 등을 현재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종합국력의 향상 노력을 무산시키고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패권 유지를 도모하려고 한다.

불균형적 양극체제 아래에서 미국이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는 현상 타파적 안보전략을 실행할 경우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작금의 불균형적 양극체제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질서안정을 촉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먼저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개입정책(engagement) 위주의 동아시아정책을 수행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개입정책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미국 주도의 국제

¹⁴⁴ 세력전이가 발생하여 부상하고 있는 잠재적 패권국이 쇠퇴하고 있는 패권국에게 도발전쟁을 일으킨다는 세력전이론의 명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세력전이로 인하여 패권국에 의한 예방전쟁 가능성이 크다는 논점을 전개하는 논문으로는 Steve Chan, "Exploring puzzles in Power-transition Theory: Implications for sino-american Relations," *Security Studies*, Vol. 13, No. 3 (Spring 2004).

I
II
III
IV
V

질서 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인권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체제변화를 도모하게 만드는 대외정책이다. 이 경우에도 개입정책은 관계악화에 따른 우발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군사봉쇄정책과 더불어 시행되지만, 정책적 우위는 공격적 성격을 지닌 대중봉쇄정책(containment)보다는 군사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연성권력 행사에 입각한 개입정책(engagement)에 주어져 있다. 한국 정부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현상타파가 아닌 현상유지전략으로 유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를 균형적 양극체제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안보공동체 구성 등을 현 시점에서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한반도가 미국의 예방전쟁의 대상으로 되는 사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적 고려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자체적 군비증강을 추진하여 동맹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방력 증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안보역량 확충을 통하여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상황에 직면할 경우 국가안보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비록 불균형적 양극체제이지만,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기반 위에서 현상유지적 안보전략을 수행하면서도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의 연성권력을 행사한다면, 중국, 북한 등의 체제변화를 견인해냄으로써 미국의 국익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되어 미국의 국력과 대등하게 될지라도 중국의 점진적인 체제변화

가 미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가장 유익한 방식이라고 미국을 설득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 상호 간에는 평화가 유지된다는 민주평화론에 입각,¹⁴⁵ 중국의 민주화가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담보해주는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의 현상유지적 동아시아정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구조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북한억지 및 동아시아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각종 통제장치를 개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관한 한국 정부의 시각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평화,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천명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미국이 중국의 민주화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안보·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데 정책적 기본목표를 두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군비현대화를 통한 균형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하며, 북한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긴장

¹⁴⁵ 민주주의 국가 상호 간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역사적 경우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이 앞으로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확산이 보다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창출할 것이라는 연역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민주주의체제의 정치기들은 자신의 통치기반을 외부의 적을 상정하거나 전쟁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둘째, 민주주의체제의 시민들은 전쟁 발발 시 생활기반 파괴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호전적인 인사 및 정당을 국가 지도자나 집권당으로 선출하지 않는다. 셋째, 법의 지배에 익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보편적 국제규범 및 가치를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불건전한 정책과 가치들을 토론을 통하여 걸러내는 민주적 논쟁문화를 가지고 있다. Charles A. Kupchan and Clifford A. Kupchan, "Concerts, Collective Security, and the Future of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6, No. 1 (Summer 1991), p. 149.

I
II
III
IV
V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패권동맹이 아니라 방어동맹에 머물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분단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패권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게 주지시키고,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예방전쟁 유혹을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만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예방전쟁이 시도될지라도 전장이 한반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북한과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중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에 따른 북한 고립화를 방지하고, 한국의 불가침협정 체결이 북한 고립화를 도모하여 흡수통일을 하려고 한다는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더욱이 한국은 미·중 패권갈등에서 전략적 선택이 어려운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하여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비화되지 못하도록 적극 방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내의 평화교육 및 운동을 적극 지원하거나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의 민간단체들의 평화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흡수적 형태의 ‘적대적 세력균형’ 상태를 로크적 형태의 ‘친화적 세력균형’ 형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역내 국가들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시켜 민족국가 중심의 주권개념 및 국익추구의 가치 정향성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집합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중국의 지역패권 저지를 위한 미국의 봉쇄정책은 봉쇄보다는 개입정책 위주로 노선을 재정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는 미국과 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이들이 주도하는 안보공동체를 창설하는 등 지역패권

을 공유하는 한편, 패권경쟁이 안보경쟁보다는 연성권력 경쟁으로 전환되게 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대립과 갈등의 동아시아 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되, 갈등정도가 낮은 균형적 양극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우선 동아시아 안보위협으로 등장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토대를 닦는 등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소련의 붕괴, 중국의 개혁·개방 등으로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파괴됨에 따라 북한이 세력균형 회복차원에서 체제보장 및 경제원조를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획득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제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체제 변화 내지, 붕괴를 유도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중국봉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정권의 붕괴가 친미적 통일한국을 탄생시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한반도 현상타파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위협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 핵포기에 따른 북한체제 보장 및 북·미관계 정상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의 수순을 통해 한반도 화해·협력 및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양극체제의 소산물이다. 과거 유럽에서 북한 핵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바로 독일문제였다. 양대 진영으로의 유럽분단은 패권경쟁 속에서 안보경쟁을 낳았고, 이

I
II
III
IV
V

리한 균형적 양극체제로 상징되었던 유럽의 분단구조는 동·서독의 분단과 갈등구조를 재생산하였다. 그러나 미·소 양국은 현상타파적 안보전략을 현상유지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독일분단구조는 점차 CSCE 등의 구성 및 활동으로 유럽 분단구조가 해체되면서 교류·협력의 증대, 평화통일 등으로 귀착되어 궁극적으로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만일 동아시아도 유럽의 경우와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이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연성권력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면, 불균형적 양극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기본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보공동체가 탄생되고, 이와 병행하여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도 풀려질 것이다. 더욱이 동아시아 질서가 불균형 양극체제에서 균형적 양극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경우처럼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변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현수.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서울: 그린비, 2006.
- 백승욱 편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서울: 그린비, 2005.
- 예츠칭. 이우재 옮김.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2005.
- 이장훈. 『네오콘 팩스 아메리카의 전사들』. 서울: 미래M&B, 2003.
- 장재철.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전영재. 『미국 경제 생산성 신화 지속될 것인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정무섭. 『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내용과 시사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조반니 아리기, 백승욱 옮김.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원』. 서울: 그린비, 2008.
- 존 J. 미어세이머, 이춘근 옮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서울: 나남출판, 2004.
-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 _____. 『2007-2008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8.
- _____. 『2008-2009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2008.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국양서원, 2005.
- 황병덕. 『대전환기의 세계사회』. 서울: 한울, 1992.
- Altwater, E. and K. Hübner. *The End of the U.S. American*

- Empire?* in: Vãth, W., Political Regulation in the Great Crisis, Berlin, 1989.
- Cordesman, Anthony H.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2*.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2.
- Everest, Larry. *Oil, Power and Empire*. Canada: Common Courage Press, 2004.
- Kee, Woo Sik. *et al.* (eds.),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s*.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5.
- Khanna, Parag. *The Second World, Empires and Influence in the New Global Order*. New York: Random House, 2008.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 Mensch, G. *Basisinnovation und Verbesserungsinnovation*. in: Zeitschrift für Betriebswirtschaft Nr. 4., 1972.
- _____. *Das technologische Patt - Innovation überwinden die Depression*. Frankfurt/M., 1975.
- NIC.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8.
- Nye, Joseph S. and Richard Armitag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 Organski, A.F.K.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Strange, Susan. *Toward a Theory of Transnational Empire*. in: Vāth, W., *Political Regulation in the Great Crisis*, Berlin, 1989.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2. 논문

김태호. “중국의 정치군사적 성장과 향후 전망.” 『현대중국』. 창간호, 1997.

김흥규. “미·중 전략·경제대화 분석: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27,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9.8.21.

김우상. “미·중 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면홍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성홍·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 서울: 오름, 2008.

신상진. “북핵문제와 중국의 대응.” 『국제평화』. 제4권 1호, 2007.

_____.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과 북·중 관계.” 『북한』. 2009년 11월호, 2009.

_____.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증대.”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

_____. “대만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동북아 안보위기의 협력적 관리.” 『국가전략』. 제13권 3호, 2007.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 국제정치』. 통권 37호, 2002.
-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25권 2호, 2009.
- 이호철. “탈냉전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보와 경제의 상호관계.” 『국제정치경제연구』. 제1집, 1997.
- 이인호.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통일연구원 내부회의 자료, 2009.9.15.
- 장노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난 국제정치이론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1호, 2003.
- 장달중·임수호. “부시 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10권 2호, 2004.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의 석유자원확보전략과 시사점.” 국제경제팀 보고서, 2004.10.7.
- 정진영.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동아시아 불안정론에 대한 비판.” 김태현 편. 『신동아시아 안보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1997.
- 황병무. “21세기 동북아 안보질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교수논총』. 제37집(국방대학원), 2004.
- Altman, Roger C. “The Great Crash, 2008: A Geopolitical Setback for the West.” *Foreign Affairs*. Vol. 88, Issue. 1, January/February 2009.
- _____. “Globalization in Retret: Further Geo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Financial Crisis.” *Foreign Affairs*. Vol. 88, No. 4, July/August 2009.

- Baum, Richard.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An American Perspective." A Paper Present at the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Sino-US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Seoul, September 11, 2009.
- Burrows, Mathew J. and Jennifer Harris. "Revisiting the Future: Geopolitical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2, April 2009.
- Buzan, Barry and Gerald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 Chan, Steve. "Exploring puzzles in Power-transition Theory: Implications for sino-american Relations." *Security Studies*. Vol. 13, No. 3, Spring 2004.
- Christensen, Thomas J. "Shaping the Choices of a Rising China: Recent Lesson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3, July 2009.
- Dingli, Shen. "North Korea'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Autumn 2006.
- _____. "The Sino-US Relations and Alliance Structures in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 at the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Sino-US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Seoul, September 11, 2009.
- Doyle, Michael W.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 Economy, Elizabeth C. "The G-2 Mirage." *Foreign Affairs*. Vol. 88, Issue. 3, May/June 2009.

- Friedberg, Aaron.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 Kupchan, Challes A. and Clifford A. Kupchan. "Collective Security, and the Future of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6, No. 1, Summer 1991.
- Lam, Willy. "Beijing Mulling Tougher Tactics Against Pyongyang." *China Brief*. Vol. IX, Issue. 12, June 2009.
- Layne, Christopher. "The 'Poster Child for offensive Realism': America as a Global Hegemon." *Security Studies*. Vol. 12, No. 2, Winter 2002/3.
- Matsudono, Michael. "Incomplete Hegemony: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Order in Asia,"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2003.
- Munro, Ross. "China: The Challenges of a Rising Power,"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2000*. San Fancisco: Encounter Books, 2000.
- Nye, Joseph.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4, Winter 2002/2003.
- Posen, Barry. "Command of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1, Summer 2003.
- Rice, Condolleezza.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79, Jan-Feb 2000.

Richardson, James.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No. 38, Winter 1994/95.

Ross, Robert 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Spring 1999.

Taliaferro, Jeffrey W.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2000/2001.

Wan, Ming. "Wealth and Power: Economic Transformation of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8, No. 2, Spring 1996.

White, Hugh. "The geo-strategic implications of China's Growth," R. Garnaut, Ligang song and Wing Thyee Woo (eds.) *China's New Place in a World in Crisis*. Melbourne, 2009.

Zoellick, Robert B.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before National Committee on U.S.: China Relations, September 21, 2005.

江涌. "金融危機的影響與中國的對策." 『世界經濟與政治』. 2008年第12期.

金燦榮. "中美關係與環境外交." 『中國外交』. 2009年 第7期.

尚鴻. "金融危機對美國霸權地位的衝擊." 『現代國際關係』. 2009年第4期.

邵峰. "金融危機對國際關係的影響及中國的應對." 『世界經濟與

- 政治』. 2008年 第12期.
- 孫承. “第二次朝鮮核危機.” 『國際問題研究』. 2003年 第3期.
- 時殷弘. “美國國家導彈防禦計劃與中國的對策.” 『中國外交』. 2002年 第7期.
- 葉自成.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關於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1期).
- 王嶠生. “中國需謹慎,切勿妄言中美G2時代.” 『中國青年報』. 2009.3.3.
- 李敦球. “朝核試驗後的六方會談機制.” 『現代國際關係』. 2007年 第1期.
- 李兵 外. “溫家寶反駁中美共治說.” 『環球時報』. 2009.5.22.
- 李長久. “國際格局短期內不會發生根本性變化.” 『現代國際關係』. 2009年 第4期.
- 林利民. “朝核危機管理與中國的外交抉擇.” 『現代國際關係』. 2006年 第8期.
- 張璉瑰. “擔心伊朗模式加身朝鮮的真實意圖.” 『中國評論』. 2006年 9月號.
- 錢文榮. “G2試圖將中國變成美國的附庸.” 『半月談』. 2009.4.28.

3. 기타자료

- 『경향신문』.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중앙일보』.

이태환. “중·미관계의 변화.” <<http://www.eastasianstudies.org>>.
전병근. “美·中 G2 시대의 개막, 한반도의 앞날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807104720&Section=05>.

Clinton, Hillary R. “Security and Opportunit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3005/hillary-rodham-clinton/security-and-opportunity-for-the-twenty-first-century>>.

_____. “U.S.-Asia Relations: Indispensable to Our Future.”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33.htm>>.

“Joint Press Release on the First Round of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http://www.state.gov/r/pa/prs/ps/2009/july/126596.htm>>.

Junbo, Jian. “China says no thanks to G2.” <<http://www.atimes.com/atimes/China/KE29Ad01/html>>.

Liangui, Zhang. “DPRK’s moves driven by inner urge to power.” <http://www2.chinadaily.com.cn/opinion/2009-06/01/content_7957910.htm>.

“Obama says North leader in good health.” <<http://joongangdaily.joins.com/article/view.asp?aid=2910377>>.

O’Hanlon, Michael E.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6_north_korea_ohanlon.aspx>.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to-the-United-Nations-General-Assembly>.

“Remarks by the President a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Remarks-by-the-President-at-the-US/China-Strategic-and-Economic-Dialogue>.

“US looks to China for NKorea progress.” <<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hYphBjQpSQaF-liOItH4PhHufOGwD9AS3P700>>.

楚樹龍. “中國外交不必太高調.” <<http://www.huanqiu.com>>.

鄭永年. “中國如何在G20定位國家利益.” <http://www.chinaelections.org/PrintNews.asp?News_ID=145816>.

邵峰. “朝核問題走向及中國的應對.” <<http://www.iwep.org.cn/info/content.asp?infold=2666>>.

劉建超. “六方會談仍是解決朝核問題的有效途徑.” <<http://world.people.com.cn/GB/8212/9491/57325/4901978.html>>.

沈世順. “對朝鮮核試驗的看法.” <<http://world.people.com.cn/GB/1030/4931822.html>>.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發表聲明.”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564332.htm>>.

“張業遂: 安理會決議向朝鮮發出了積極正面的信息.” <<http://www>>.

chinanews.com.cn/gj/gj-gzj/news/2009/06-13/1732535.shtml>.

“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t569526.htm>>.

朱鋒. “中國戰略目標的昇級-- 強國富民, 與美共贏.” <http://www.dwnews.com/gb/MainNews/Forums/BackStage/2009_4_29_10_31_17_645.html>.

鄭永年. “中國在朝核問題上應吸取的教訓.”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7/forum_zp090707.shtml>.

林繼明. “制裁朝鮮, 中國成最後的輸家.” <<http://www.wyzxsx.com/Article/Class20/200906/89730.html>>.

“朝鮮領導人金正日會見胡錦濤主席特使戴秉國.” <<http://world.people.com.cn/GB/10080017.html>>.

“2009年6月23日外交部發言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http://www.fmprc.gov.cn/chn/gxh/tyb/fyrbt/jzhsl/t569091.htm>>.

黃彬華, “李明博的五方會晤方案夭折.”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7/forum_zp090703a.shtml>.

朱鋒, “中國戰略目標的昇級-- 強國富民, 與美共贏.” <http://www.dwnews.com/gb/MainNews/Forums/BackStage/2009_4_29_10_31_17_645.html>.

時殷弘. “中國如何面對朝鮮: 堅忍發揮作用.” <<http://news.sina.com.cn/o/2009-06-29/150415868502s.shtml>>.

鄭永年. “中國的崛起及其外交和戰略壓力.” <http://www.zaobao.com/special/forum/pages7/forum_zp090916.shtml>.

“中美: 小摩擦不斷, 大方向不變.” <<http://www.dwnews.com/gb/>

MainNews/Forums/BackStage/2009_9_21_16_47_17_604.html>.

상하이에서 선딩리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소장과의 인터뷰, 2009.8.14.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이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공저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 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 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9,500원
2009-15-05	북한 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8,5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합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5,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7,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8,5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7,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공저	6,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7,5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8,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6,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6,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6,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도 동향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7-01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n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 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www.kinu.or.kr